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시리즈 No. 5

산업 · 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2012. 3. 20

KDI 우천식

목 차

- I. 개괄 및 문제의 제기
- II. 2004-5년 양극화 T/F 작업의 주요 내용
- III.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실태
- IV. 양극화의 국내 산업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
- V. 정책대응의 방향과 초점 과제



개괄 및 문제의 제기

1. 개괄 및 문제의 제기

■ 양극화(격차 확대)는 성장률의 추세적 둔화와 함께 국정 최대 현안 과제

- 산업 기업간 성과 격차의 확대 → 고용소득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은 물론 사회적 통합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 근래의 '경기 침체' 국면 속에 이에 대한 우려와 정책적 관심이 배증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양극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 및 '고용소득 불안'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 성격의 대응에 급급한 상황

■ 양극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우리 경제 '산업·기업 경쟁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며 문제의 구조, 심각성 등은 이미 충분히 분석, 예견된 바 있음

- 2004-05년에는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T/F를 구성하여 양극화의 실태, 원인, 정책적 대응방향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양극화 (04.9),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05.1)

- ❖ KDI (총괄)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여성개발원,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농촌연구원 등

1. 개괄 및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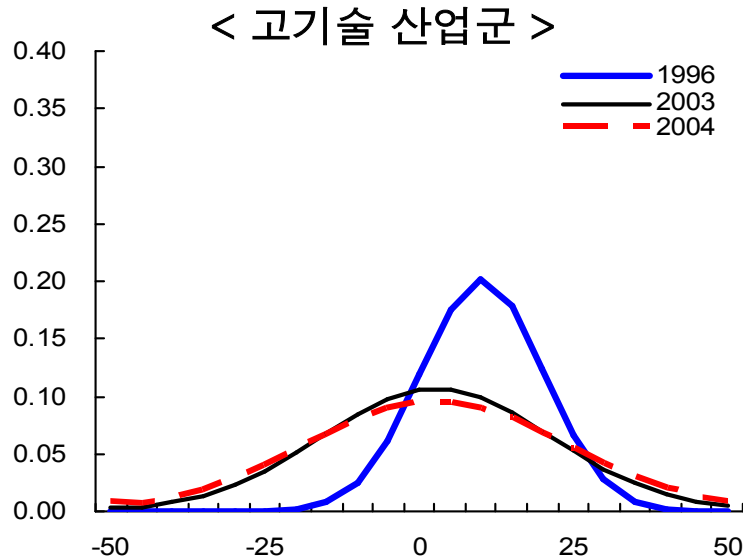
■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과 차별화되는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구도’에 있어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산업기업의 양극화는 2004-05년 작업이 예측한 바와 같이 부문·업종·기업규모별 ‘유형적 양극화’와 함께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각 집단내 개별주체간의 ‘개체적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 경쟁력 구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선도대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NTBF)- 외국계 MNE’의 삼각축(tripod)이 심화, 착근하지 못하고 소수 선도대기업의 역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

■ 본 자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상황전개 및 추세변화를 포함하여 산업·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현 시점에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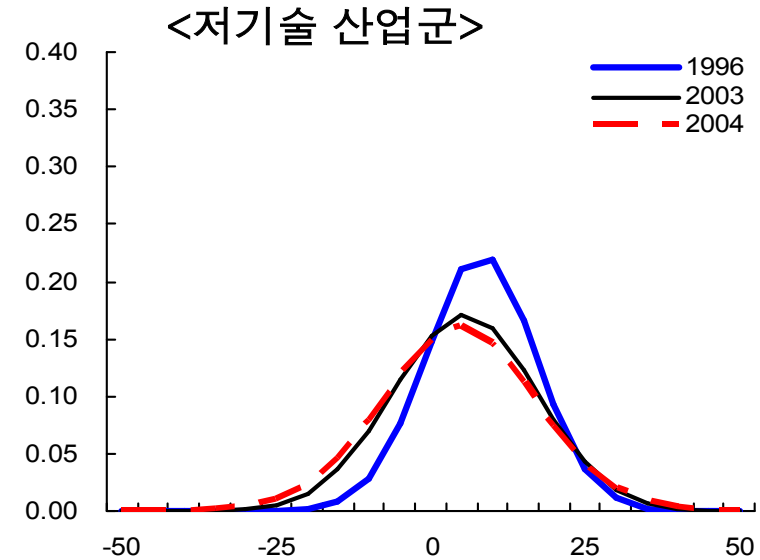
>> 격차 확대 vs. 양극화 : 개념적 문제 (예시)

예 1: 제조업 기술수준별 산업군 외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분포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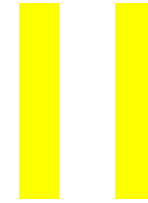
양극화: 상위-하위 집단 증가
중간집단 감소
(bi-polarization)

=> 성과격차 확대 + 양극화



하향 “쏠림” : 하위 증가
상위-중위 감소
(down-skewing)
(Polarization?)

=> 성과격차 확대 (하향), 양극화 아님



2004/5 양극화 T/F 작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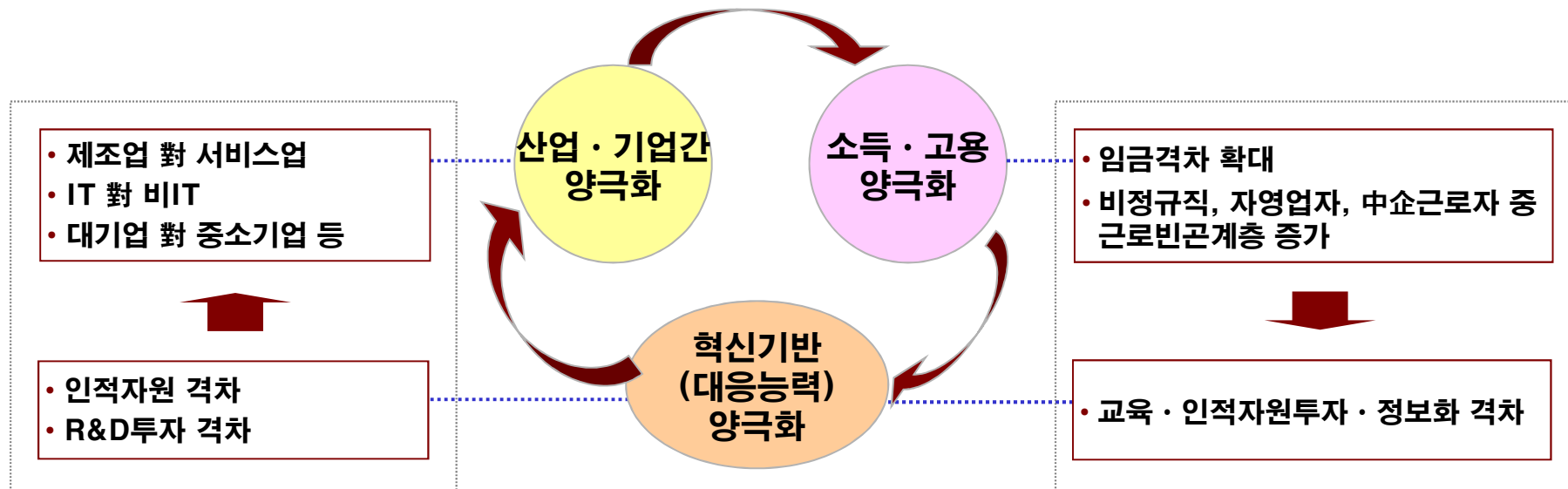
1. 양극화의 구조
2. 양극화의 3대 요인
3. 양극화의 전망
4. 양극화의 경제 · 사회적 영향
5. 정책방향

1. 양극화의 구조

■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양극화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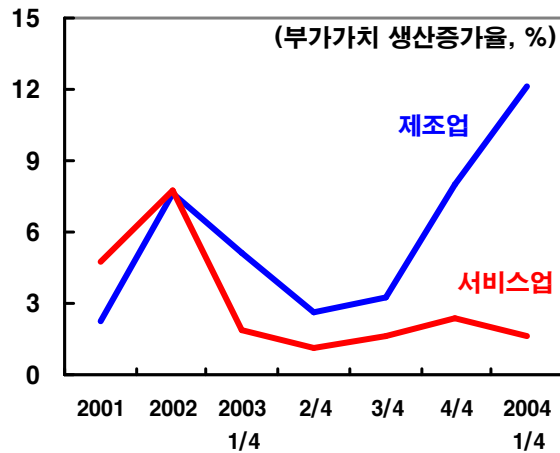
● 90년대 이후 탈공업화와 함께 지속 전개 + 경기침체 국면 속에 심화·확대

■ “산업·기업간 격차 → 소득·고용 격차 → 혁신기반(교육·인적자원 투자기회) 격차 →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 로 연결되는 (악)순환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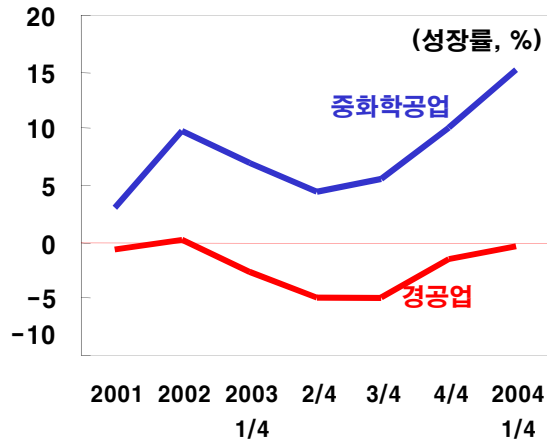


[참고] 유형적 양극화 예시: 부문간 · 산업간 · 업종간 · 기업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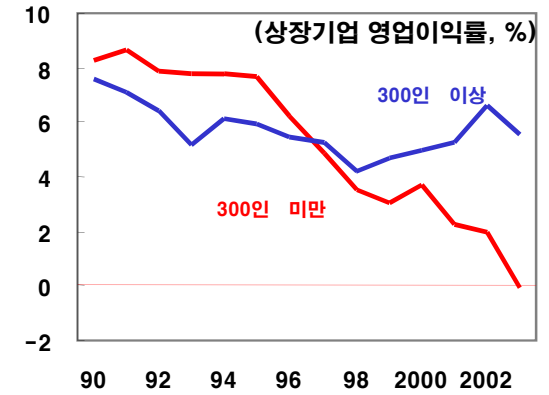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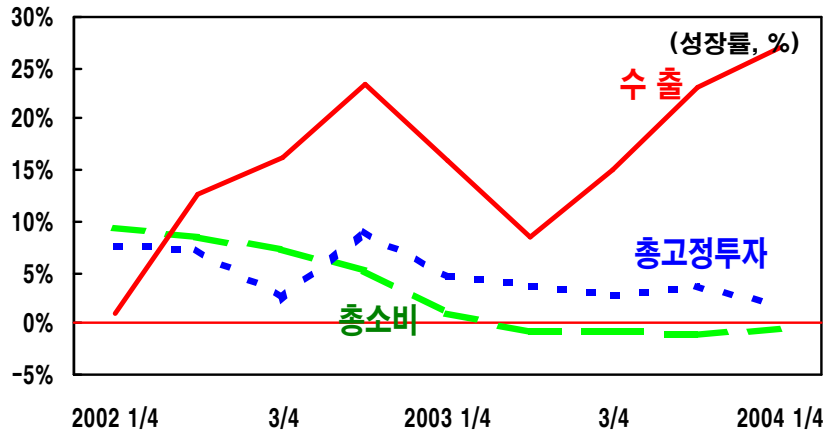
중화학 vs 경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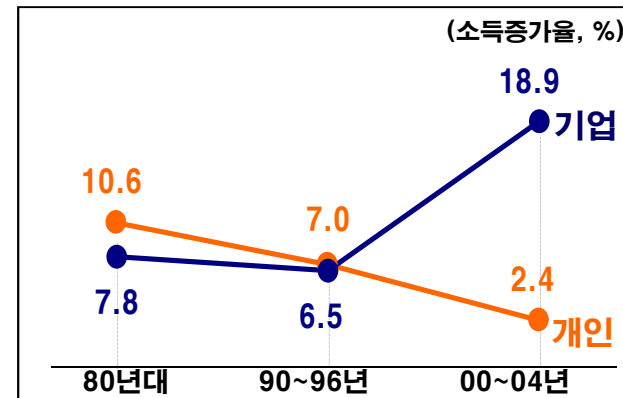
대기업 vs 중소기업



수출 vs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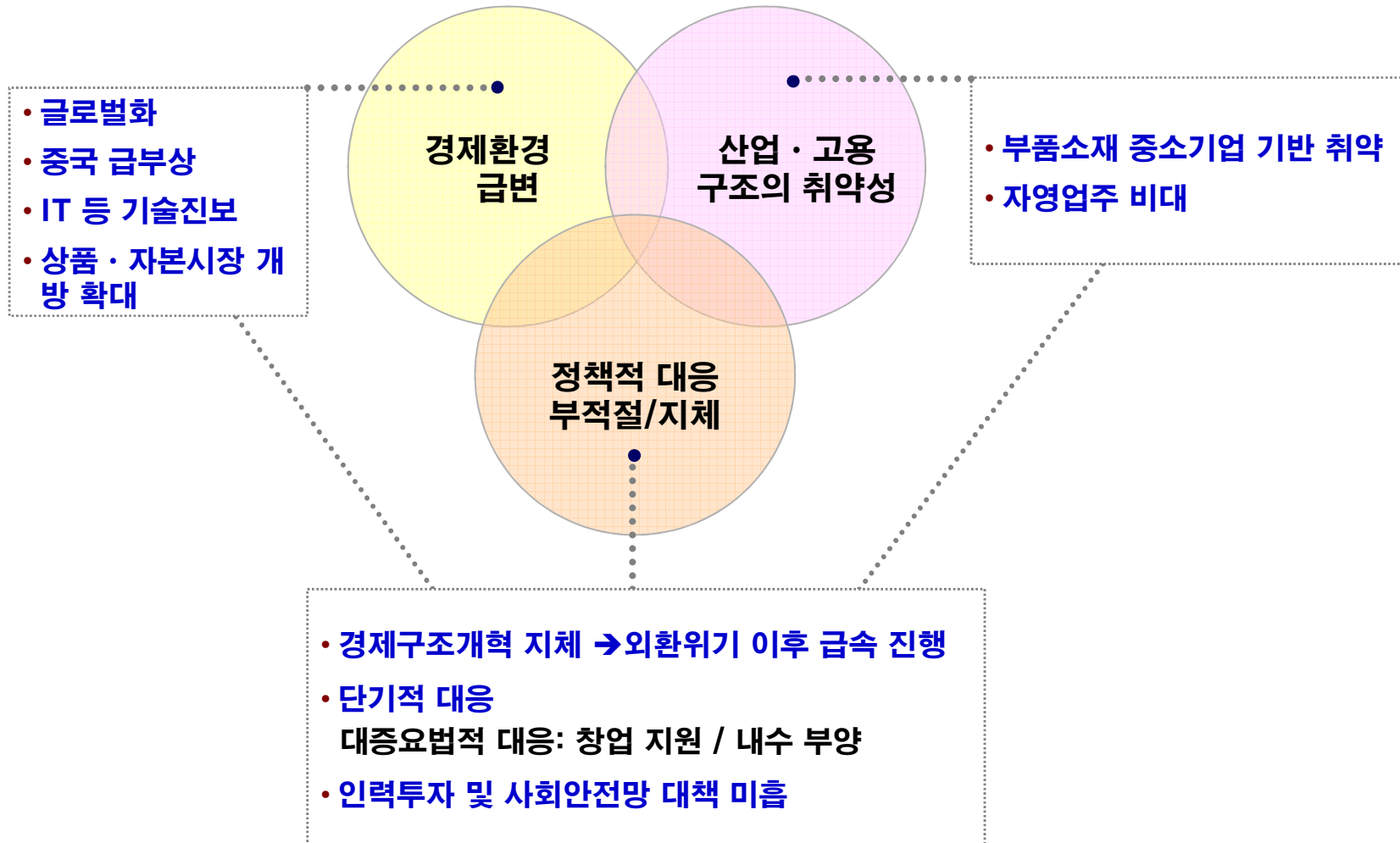


기업 vs 가계



2. 양극화의 3대 요인

■ 1) 경제환경 변화 + 2) 산업 · 고용구조의 취약성 + 3) 정책적 대응 미흡



3. 양극화의 전망

■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심화될 전망

- 글로벌화, 중국의 부상 등 **외부적 요인 지속/심화 예상**
- 산업 · 고용구조의 취약성, 경제주체간 혁신기반격차 (기술력, 인적자원 수준 등) 문제도 단기간의 정책대응으로 해소 곤란
 - **업종을 불문한 기업간 양극화**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 단계 → 심화 예상
- ◆ 혁신기반 격차의 상당부분은 교육 · 인력 · 기술 등에 관한 기존 시장 · 제도의 문제에 기인 ⇒ 문제시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 없이는 격차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곤란**

* 다만 최근(2000년대 초반) 내수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상황은 내수 회복으로 부분적으로 호전될 가능성

유형별 양극화 전망(예)

- ✓ 제조업 對 서비스업: 제조업 투자활성화, 전통적 서비스업의 혁신 없이는 당분간 지속
- ✓ 대기업 對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수준 제고 없이는 장기간 지속
- ✓ 고소득층 對 저소득층: 고용 · 교육훈련 기회 격차의 축소 없이는 장기간 지속
- ✓ 수출 對 내수: 부품소재 부문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장기간 지속

3. 양극화 전망: 주요 산업별 전망

■ 쏠산업에 걸쳐 선도업체와 함께 취약업체 비중 확대 예상

제 조 업

- ❖ 국내 선도대기업,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지속 약진
- ❖ 개도국 추격, 국내업체의 글로벌소싱 확대 → 취약업종·업체 확대

● 취약업체* 비율 (2004/5 양극화 T/F) : 외환위기 이전 0.9% → 이후 15.3% → 확대 예상

▪ 경공업부문은 물론 IT업종에서도 취약업체 비율 크게 증가

* 경공업(%): 섬유류 6.4 → 31.1, 음식료 19.4 → 35.8 등

* IT업종(%): 컴퓨터 0.0 → 25.0, 통신기기 0.0 → 37.5 등

* 제조업 취약업체는 1인당 부가가치율과 자본장비율이 감소한 업체로 정의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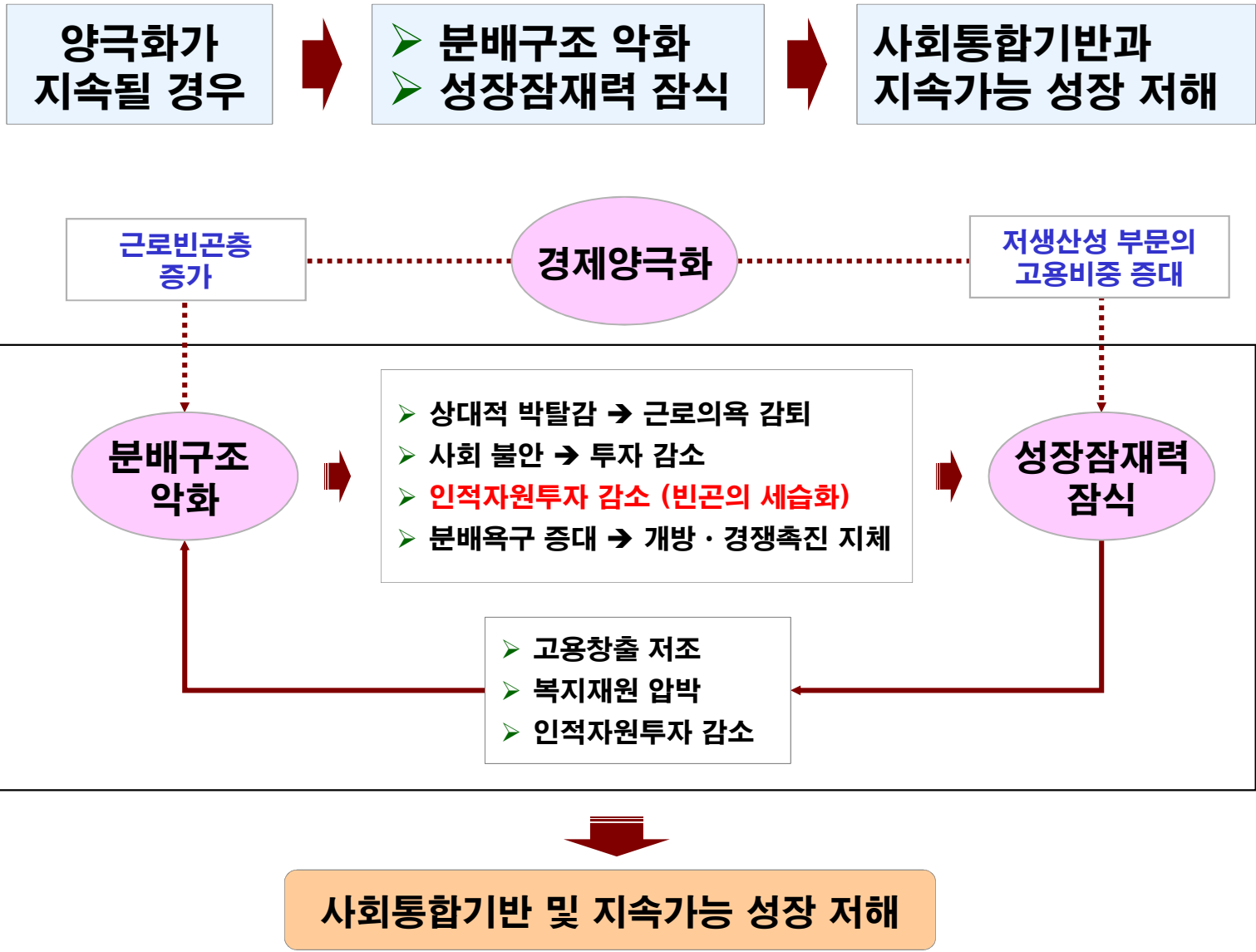
- ❖ 기업형 업체의 대두 본격화 → 소형업체의 지위 지속적 악화 예상

● 주요 업종의 수익성 2000년대 이후 계속 악화 (전문사업자서비스 포함)

● 생활서비스업의 취약업체 비율*: 25~50% →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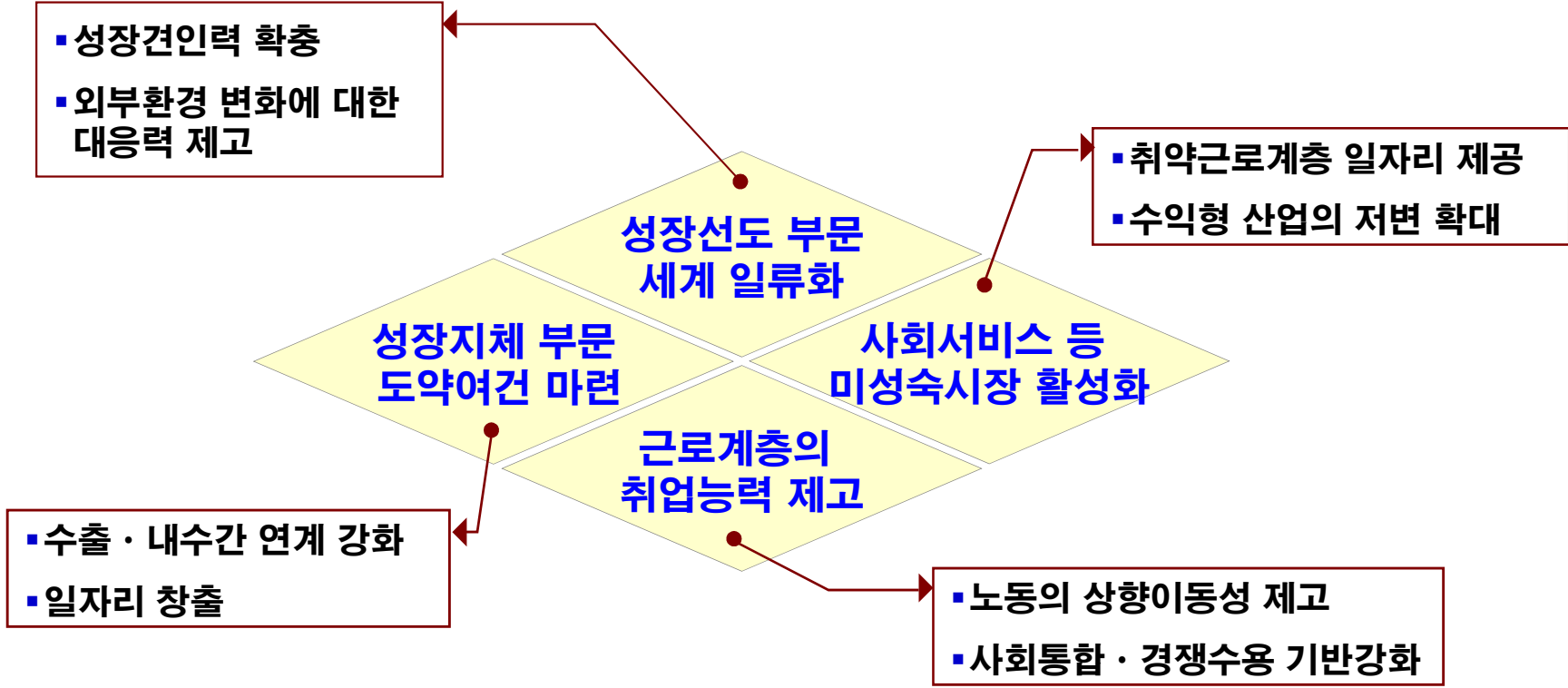
* 서비스업 취약업체 비율은 전문가·업계종사자 의견, 외국 사례, 최근 2~3년간의 수익성과에 기초하여 잠정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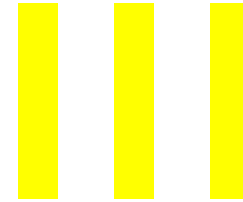
4. 양극화의 경제 · 사회적 영향



5. 정책 방향

‘낙후부문’ 을 끌어 올려 ‘선도부문’ 과 함께 ‘동반 성장’





산업 · 기업의 양극화와 경쟁력 실태

1. 추세적 전개과정
2. 제조업 · 서비스업간의 양극화
3. 제조업 부문내 양극화
4.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5. 혁신기반 격차의 확대

1. 추세적 전개과정

산업간

■ 9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양극화 지속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열위 확대



업종간

■ 선도 · 전통업종간 양극화: 제조업내 → 서비스산업내

- 제조업: IT 등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 생산성격차 확대
- 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 전통적서비스간 격차 확대



기업간

■ 성장 · 침체업종을 불문하고 기업간 (개체적) 양극화

- '고성장 업종' 에서 현저하나 점차 경공업 · 생계형서비스까지로 확산
 - 우량업체와 한계업체 비중 함께 증가, 중간업체 비중 감소
 - * 이자보상배율, 수익성(영업이익률 등) 공통적으로 관측

[참고] 업종별 구조변화와 양극화 유형

<p>제 조 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대기업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약진 지속 • 생활관련형 경공업체(섬유·음식료 등) 경영 악화, IT업에서도 중소업체 고전
<p>성장유망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경쟁 확대 → 선도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 증대 • 국내 중소기업체는 업체과다 상황 속에 수익률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사업자: 외국계 기업이 고가시장 지배 (컨설팅업 등 외국계 회사의 심각한 과점) ✓ S/W·컴퓨터관련서비스: 소형업체 고전 ✓ 문 화: 고성장업종은 대형업체 중심 ✓ 의 료: 대형 종합병원 대두, 일반병원 도산 증가 	
<p>생활형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퇴직자의 창업 급증 → 전반적인 업체과다 상태 • 기업형 업체 대두, 대체공급 확대, 소비자 취향 고급화 → 영세업체의 경영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매 업: 대형할인점은 매출기록 갱신, 재래시장 퇴조 지속 ✓ 숙 박 업: 대형호텔 호황, 영세업소 침체 (민박 등 대체공급 확대) ✓ 음 식 업: 브랜드형업체 팽창, 영세업체 고전 ✓ 개인서비스: 업체과잉, 업주 고령화 ✓ 택시 및 개인화물운수: 심각한 공급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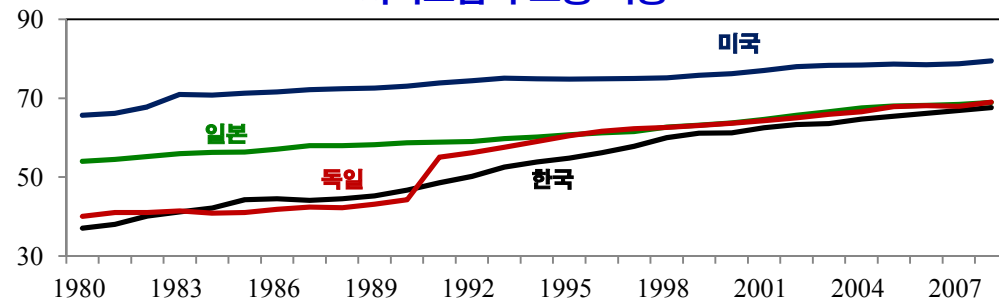
2.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양극화

■ 서비스업은 90년대 이후 제조업 및 농업이 방출하는 고용을 흡수하며 외형적으로 계속 팽창하였으나 생산성 향상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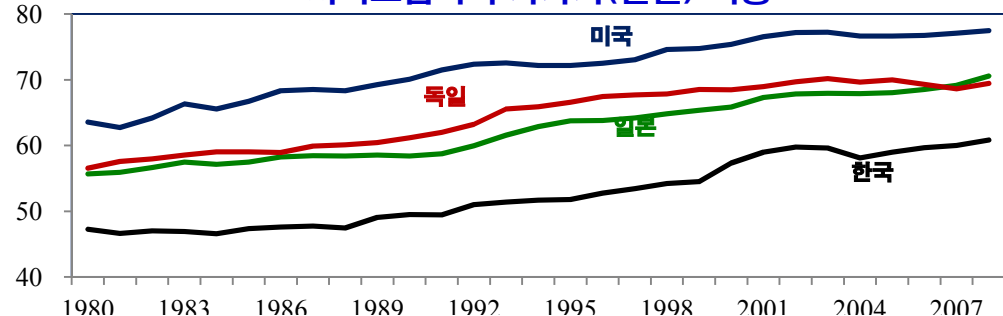
- 고용비중은 선진국 수준(67%)으로 급증, 실질 부가가치는 60% 수준으로 저조
- 제조업에 대한 생산성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고용을 계속 흡수하는 과정에서 결국 경제전체의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제조업의 1/3 수준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침체 양상이 심화
 -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대 들어서 빠르게 증가
 -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실질) 비중



자료: OECD, STAN D/B

[참고] 양극화, 산업구조변화와 소득분배 – 이해의 틀

■ 양극화는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고도화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

- 선진국 모두 탈농업화·탈공업화로 대변되는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산업·업종·기업 간 ‘불균형 성장’ 과 이에 따른 양극화를 경험
-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특징

■ 양극화의 분배에 대한 함의는 기본적으로 노동력 이동에 관한 산업구조 변화의 성격과 속도에 따라 차이

-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이동
 -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을 늘리며 팽창할 경우:
해당/연관부문의 고임금 직종의 고용 증가 → **분배개선** 경향
 - 고생산성 부문이 고용증대 없이 팽창할 경우:
저임금 부문의 고용이 증가 → **분배악화** 경향
-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
 - 구조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경우, 잠재적으로 고용증대를 수반하는 고생산성 부문이 팽창하더라도 **노동 이동의 제약성**이 심하면 **분배악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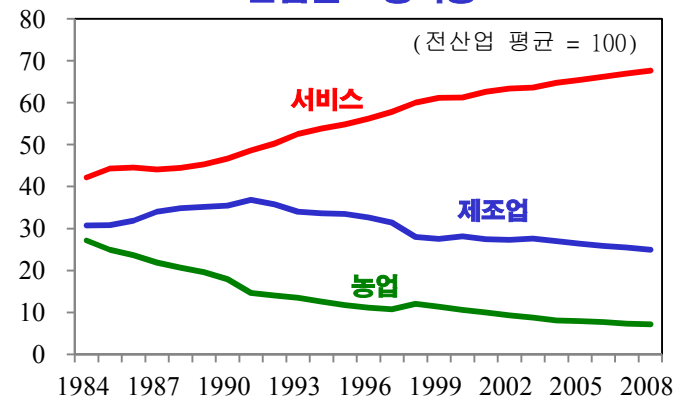
[참고] 탈공업화와 소득분배

■ 탈공업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는 1990년 이후 점차 분배개선에서 **분배악화의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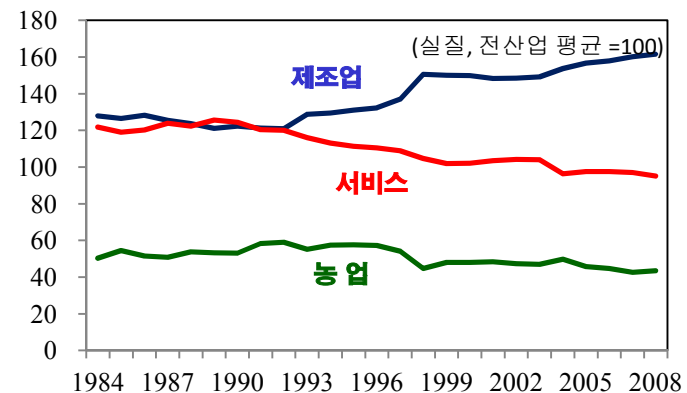
■ 생산성 및 고용비중 변화 추세

- | | 서비스 | 제조업 | 농업 |
|------|--------|---------|----|
| 고용: | ↗ | ↗('90)↘ | ↘ |
| 생산성: | ('90)↘ | ↗ | ↘ |
- 90년 이전: **분배 개선** 성향
 - 생산성: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고용: ↗ ↗ ↘
 - * 농업(저위생산성) 고용 감소, 제조업·서비스업(고생산성) 고용 증가
 - 90년 이후: **분배 악화** 성향
 - 생산성: 제조업 > 서비스업 > 농업
 - 고용: ↘(급속) ↗ ↘(완만)
 - * 제조업(고위생산성) 고용 급감, 서비스업(중위생산성) 고용 증가

산업별 고용비중



산업별 노동생산성



[참고] 탈공업화와 소득분배 - 국제비교

◆ 탈공업화/경제서비스화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 현상이나 분배문제에 관한 부담은 우리의 경우 더 클 수 있음

-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부터 탈공업화를 경험하였으나, 당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 (미국 · 프랑스 등)
- 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높은 상태에서 선진국들의 탈공업화가 지속되었으나,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
=> 반면, 우리의 경우 서비스업의 고용팽창이 i) 90년대 이후의 최근 ii) 제조업에 대한 생산성 열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급속도로 진행 → **분배문제에 관한 부담 누적**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의 생산성 및 고용증감 패턴

	1980-1990			1991-2000			2001-2008		
	생산성 (제조업 =100)	고용증감		생산성 (제조업 =100)	고용증감		서비스 생산성 (제조업 =100)	고용증감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한국	95	5.0	6.0	54	4.3	-0.7	49	2.6	-0.1
독일	118	1.7	0.1	125	3.6	0.4	109	1.9	-0.9
일본	93	2.0	0.8	104	1.1	-0.6	101	0.9	-2.0
미국	82	2.8	-0.5	85	1.8	0.4	88	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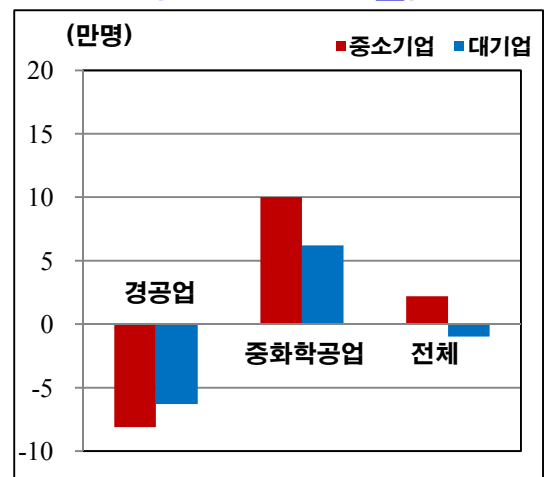
3. 제조업 부문내 양극화

■ 제조업 내에서도 90년대 이후 고용기준, 양극화 패턴과 성격에 중요한 변화

-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업종 간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간 양극화
→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간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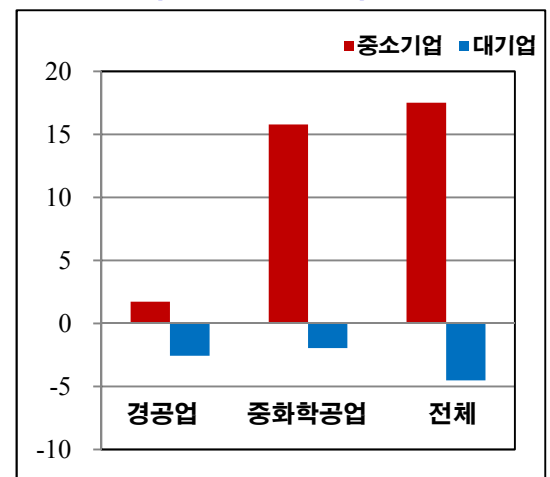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산업군별 고용증감

90년대 전반의 수출호황기
('93 ~ '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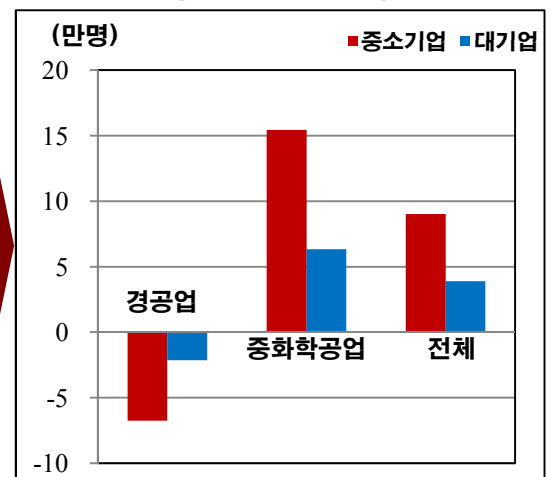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저생산성 경공업부문의 고용 위축, 고생산성 중화학공업 부문 고용 증대
→ **소득분배 개선** 경향

외환위기 이후 수출호황기
('99 ~ '02년)



✓ 경·중화학공업을 막론하고, 고생산성 대기업의 고용 감소,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 **소득분배 악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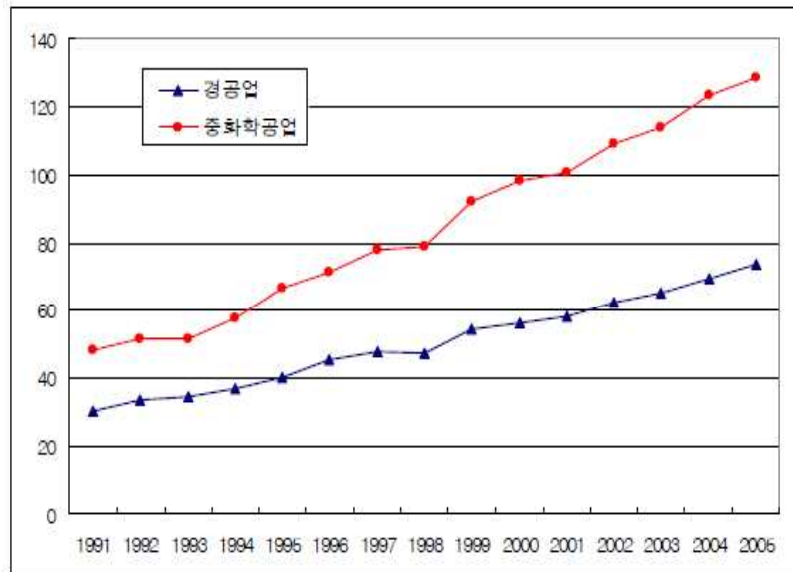
최근의 동향
('03 ~ '09년)



✓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저생산성 경공업부문의 고용 증가, 고생산성 중화학 부문 고용 감소
→ **소득분배 악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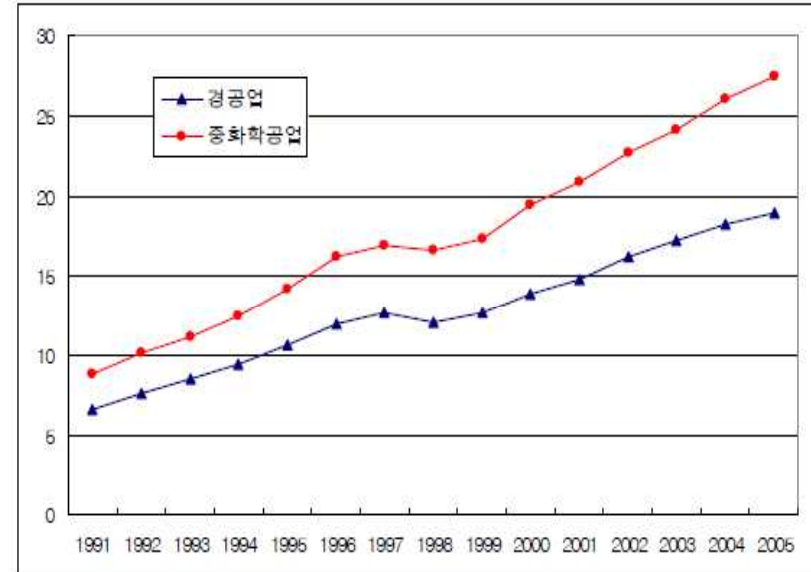
[참고] 경공업 vs. 중화학 공업: 노동생산성 및 임금

노동생산성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1인당 급여액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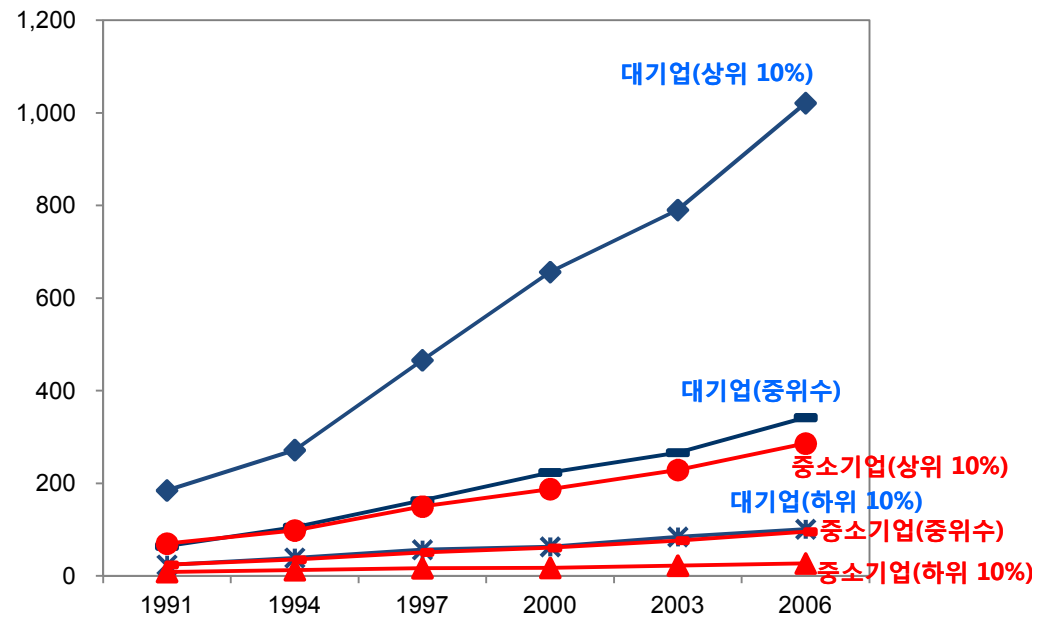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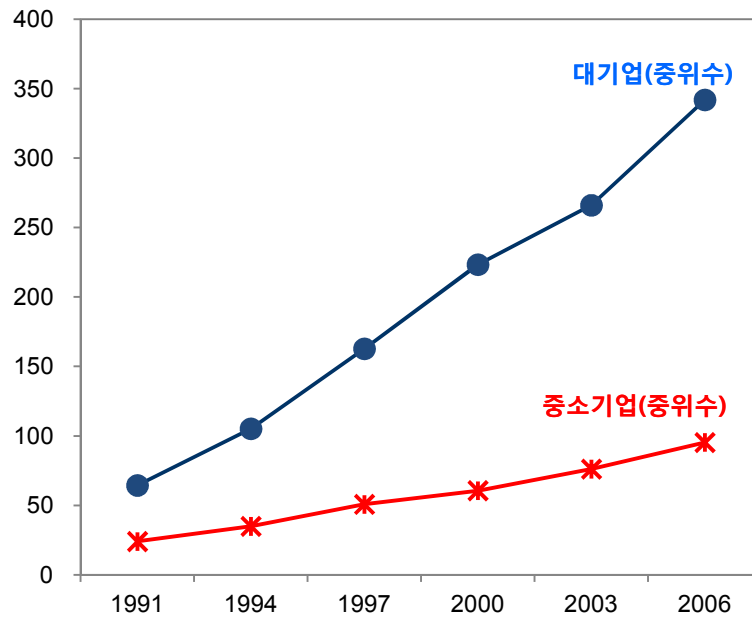
자료: 주현 (2007), 대·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3. 제조업 부문내 양극화 : 대 · 중소기업간

대중소기업, 부문간 양극화와 함께 부문내 양극화가 동시 진행 중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 점차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 각각에서 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제조업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문간, 부문내 양극화 추세 ('9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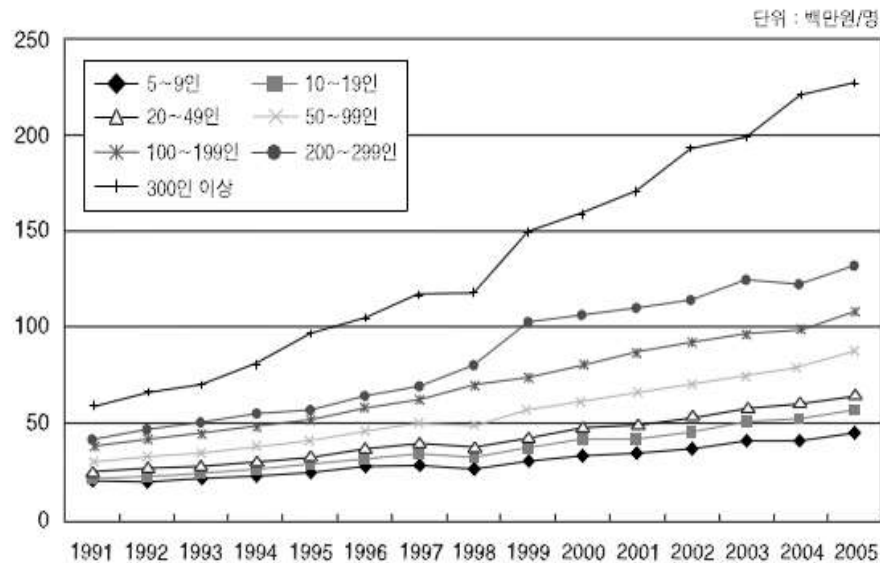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미시자료

[참고]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기업규모별 생산성 및 임금 격차 지속 확대

- 제조업의 경우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기업의 생산성이 급증하는 반면 1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정체하거나 완만히 증가
-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임금수준: 소기업일수록 더 큰 폭으로 대기기업에 대한 임금격차 확대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추이('9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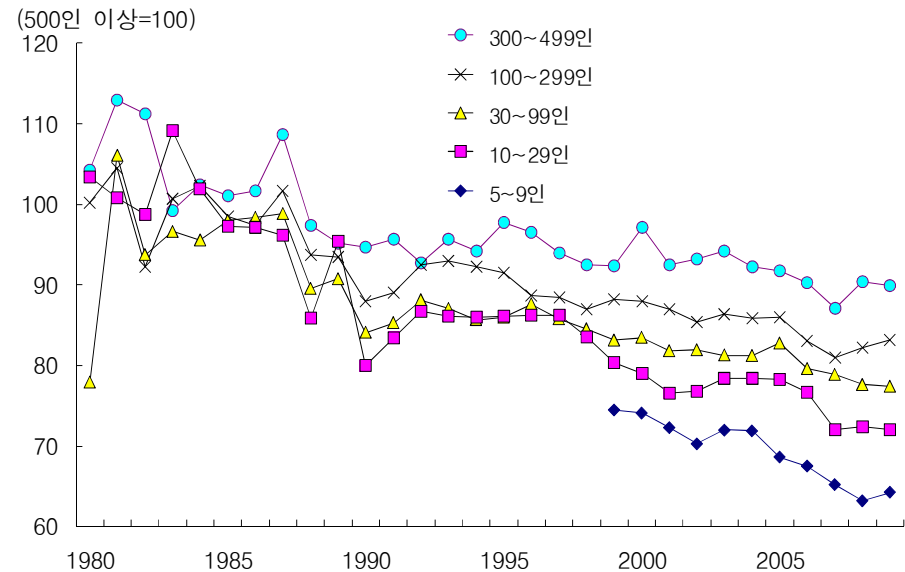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원시자료.

주 : 불변가격 기준.

자료: 주현 (2007), 대·중소기업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대기업 대비 규모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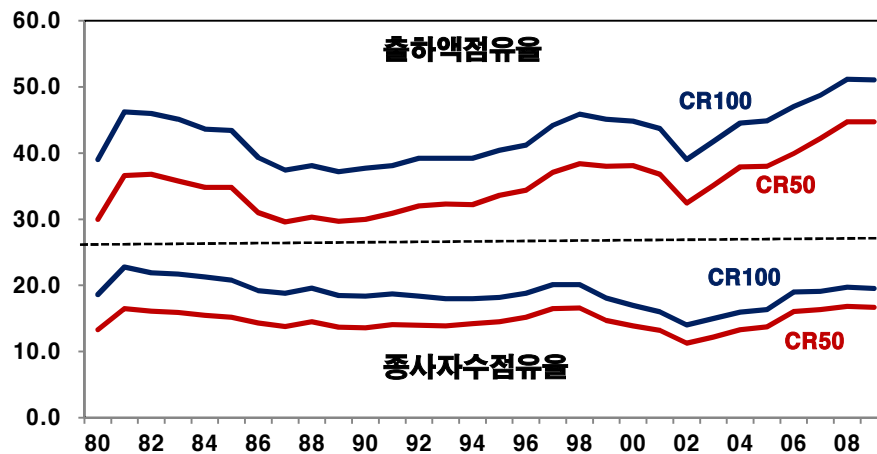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 //www.kosis.kr](http://www.kosis.kr))

[참고] 경제력 집중 현상의 심화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심화와 함께 경제력 집중 현상도 2000년대 들어 심화되는 추세

-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 집중률(상위기업의 출하액, 종사자수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 일정 정도 감소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급등
 - 08년 현재 출하액 기준 상위50대기업의 출하액 비중(CR50)는 51.1%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 정도(26.8%)가 상위10대 기업의 비중 (CR10; 고용비중은 8.7%)
-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존재
 - 자산기준 상위 40대 민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도 최근 급증 (2007년말 1045개 -> 2010년 말 1381개)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의 장기 추이 (상위 50대 및 100대 기업)



	상위 기업 집중률 (출하액 기준)			
	CR10	CR50	CR100	CR200
출하액	25	42.2	48.7	54.5
종사자수	8.7	14.9	17.6	21.1

자료: 이재형(2010) 시장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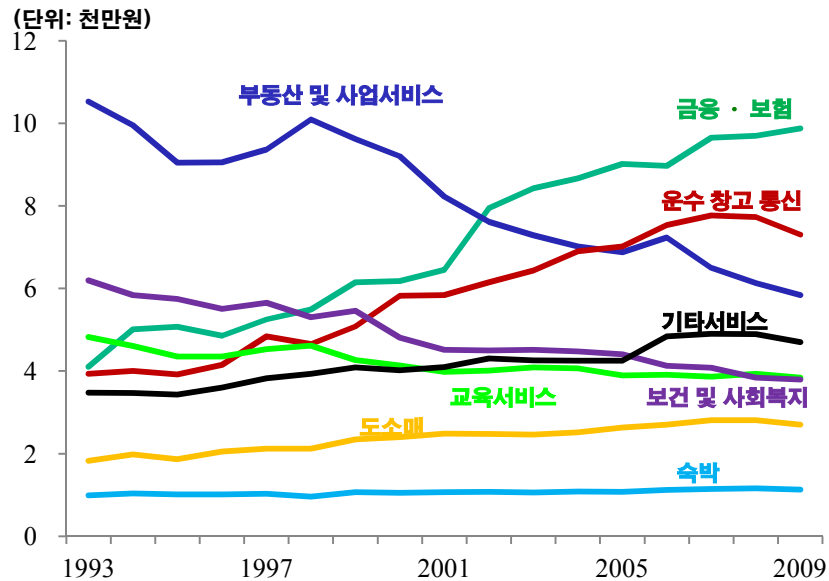
4.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 개괄

■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의 특정 업종 집중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 현상은 미약
(제조업에 비해 업종별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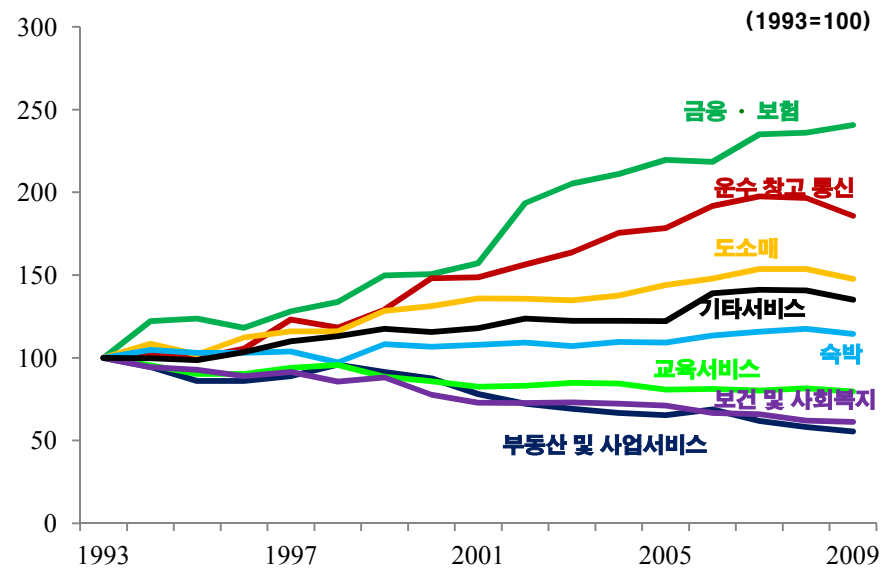
○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에 있어서 업종간 격차가 점차 확대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는 추세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실질생산성 변화 추세

실질생산성 수준



1993년 대비 실질생산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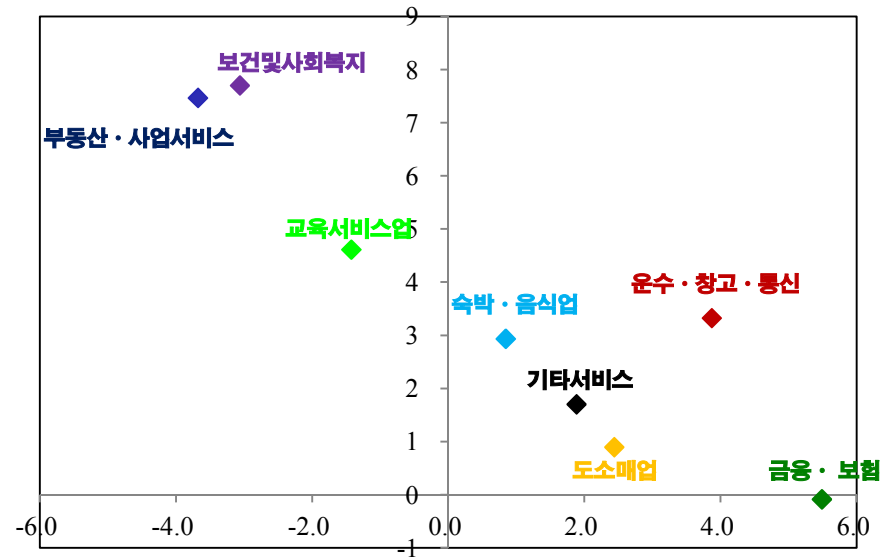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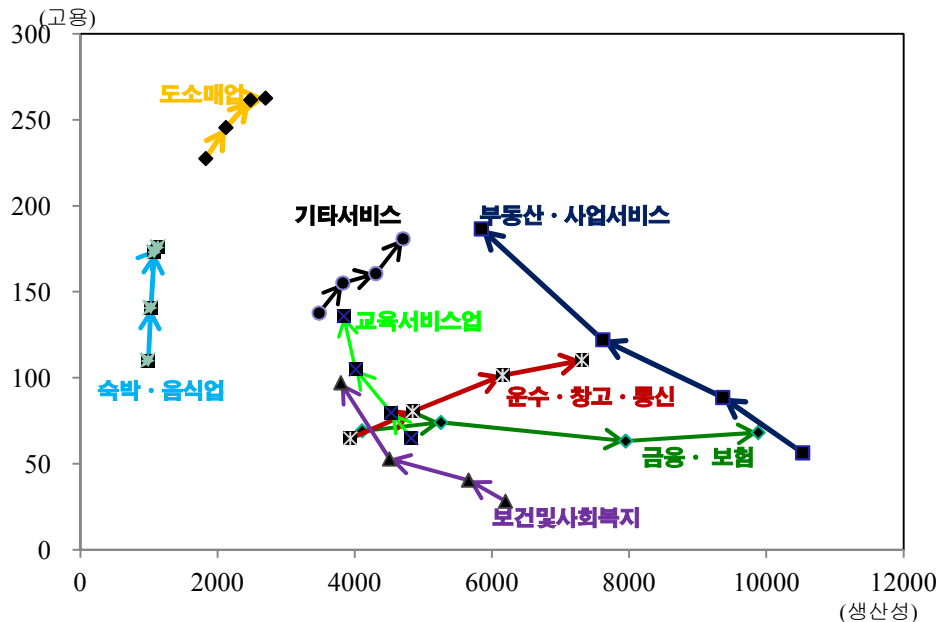
4.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 업종별

■ 서비스업내 고용구조를 볼 때 **저생산성 업종 고용**은 90년대 이후 계속 확대 반면, **고생산성 업종**의 고용은 정체 · 감소 추세

○ 이와 함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업종의 고용은 정체 · 감소하고 생산성이 정체 · 하락하는 업종의 고용은 증가하는 현상 관측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생산성과 고용변화 추세 ('93, '97, '02, '0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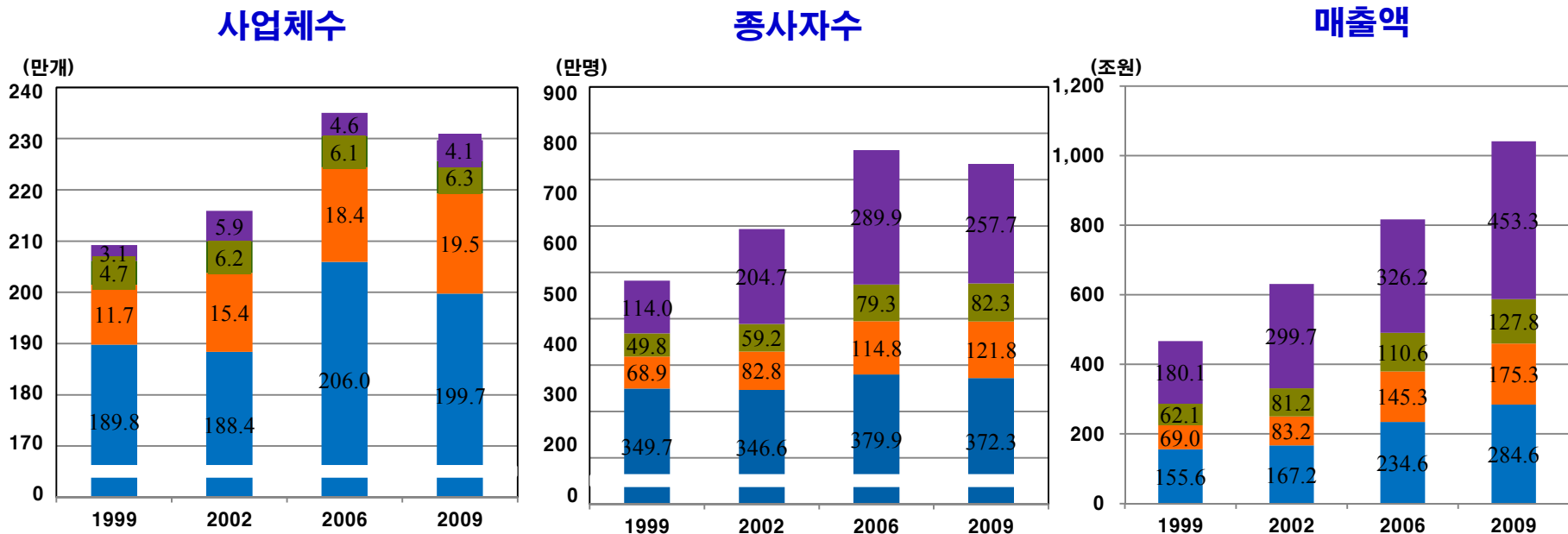
업종별 생산성 및 고용증가율(1993~2009년)



4.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 기업규모별

■ 경제위기 이후 저생산성 서비스업종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규모별 양극화 발생(제조업보다는 미약)

-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영세자영형 업종에서 기업규모별 분화 진행
 - 종사자수 20인 이상의 업체의 고용, 매출액 비중 증가
 - 5인 미만 영세업체의 비중, 특히 고용 비중 감소: 0%('99) -> 44.6%('09)
- *전통적 서비스업의 '탈영세화' 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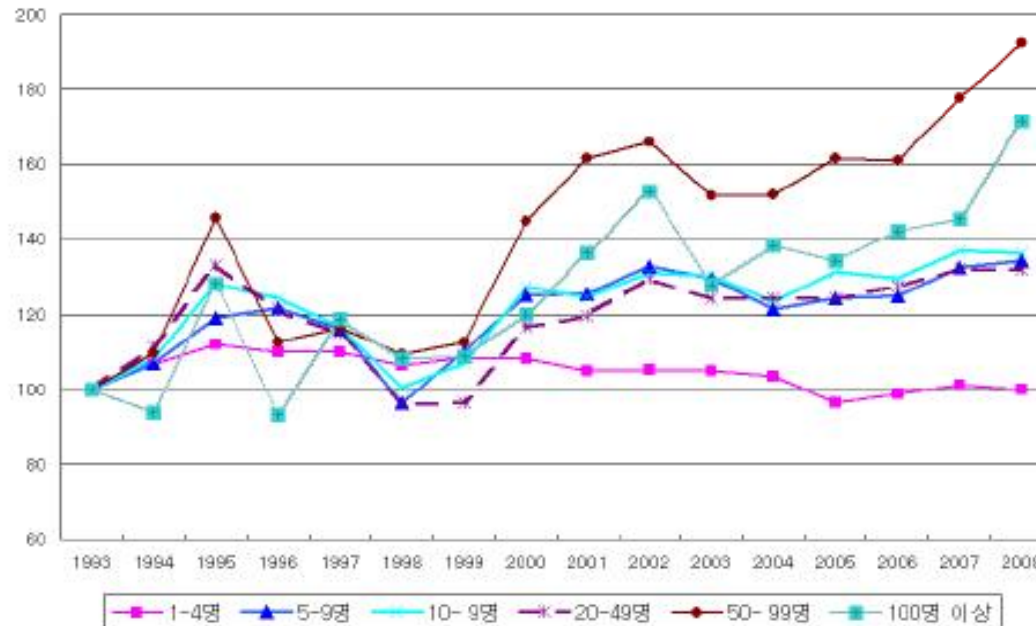


* 그래프 내의 숫자는 기업규모별 비중임.
 ** 서비스/도소매 통계조사의 조사대상업종만을 포함한 추세임
 자료: 서비스업 및 도소매 통계조사

[참고] 도소매업의 기업화 추세

■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종사자수 50-99명 규모의 기업형 업체의 숫자가 크게 증가

- 종사자수 100명 이상 업체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급증 => 이후 급감/정체 => 최근 들어 급증세
 - 5인 미만 영세업체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소세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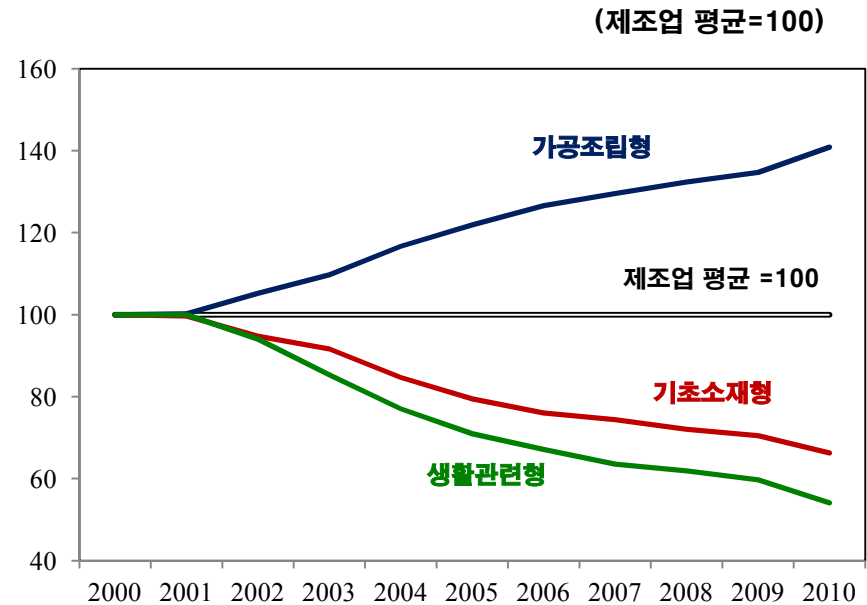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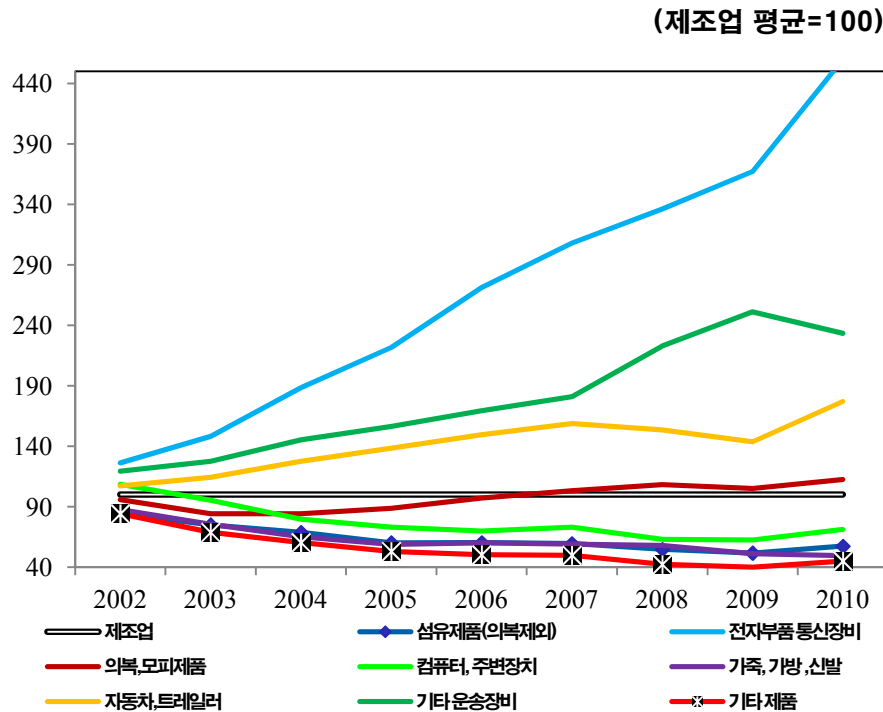
자료: 차문중, 김준경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4. 서비스업 부문내 양극화 : 유형별

■ 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추세적 양극화는 최근의 성장률 저하 국면 하에서 가시화/심화되는 양상(경기순환적 양극화 가세)

○ 제조업의 경우, 선도대기업 주도의 수출주력업종에 비해 내수의존도가 높은 생활관련형 업종(음식료 · 섬유 의류 등)의 상대적인 침체 추세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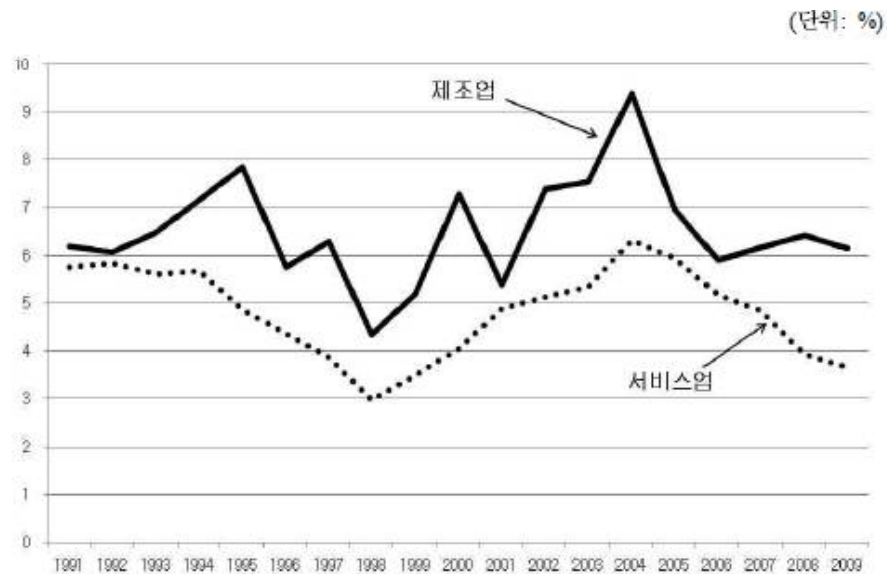
제조업 업종별 최근 생산활동 추이 (1999~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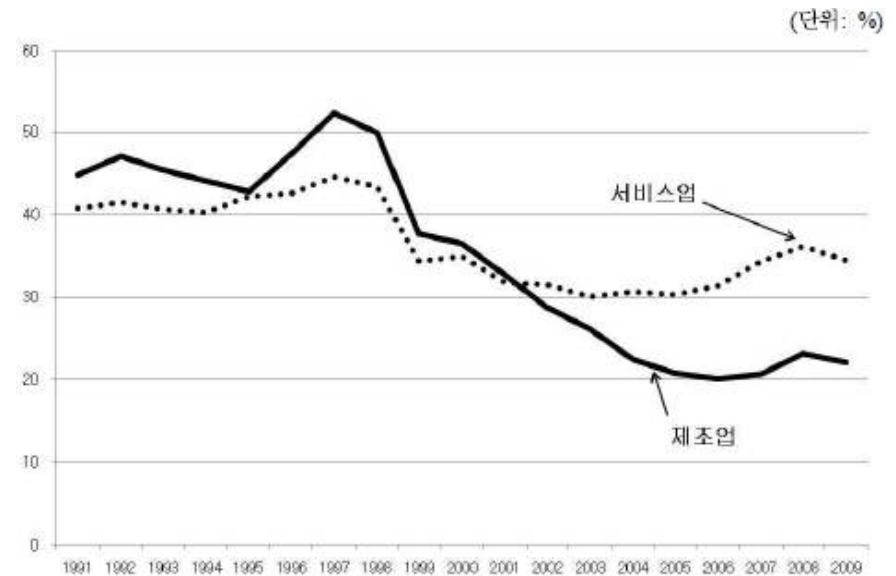
[참고] 제조업에 대비한 서비스업의 경영 지표

- 총자산 영업이익률: 90년대 초반 이후 제조업에 비해 열위
=> 상당한 격차 지속; 90년대 중반 이후 확대 추세
- 차입금의존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제조업을 상회 => 격차 확대 양상

업종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업종별 차입금의존도



자료: 차문중, 김준경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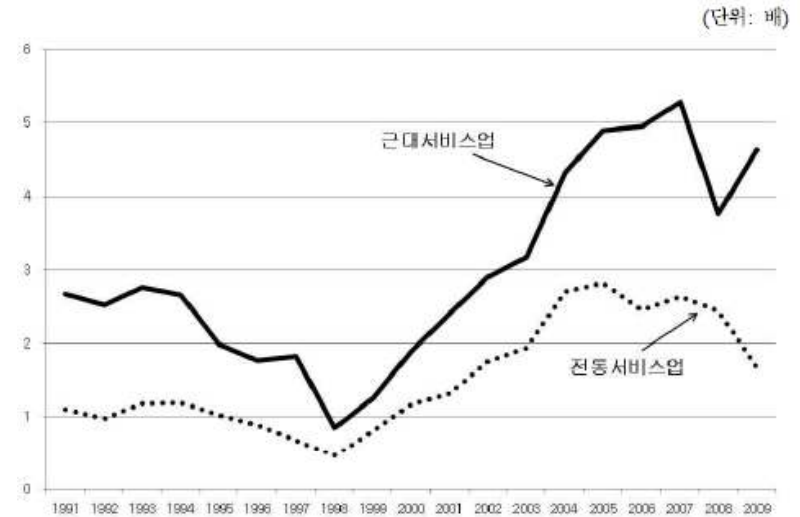
[참고] 서비스업내 부문간 이자보상배율

○ 근대 vs 전통서비스업: 외환위기 이후 격차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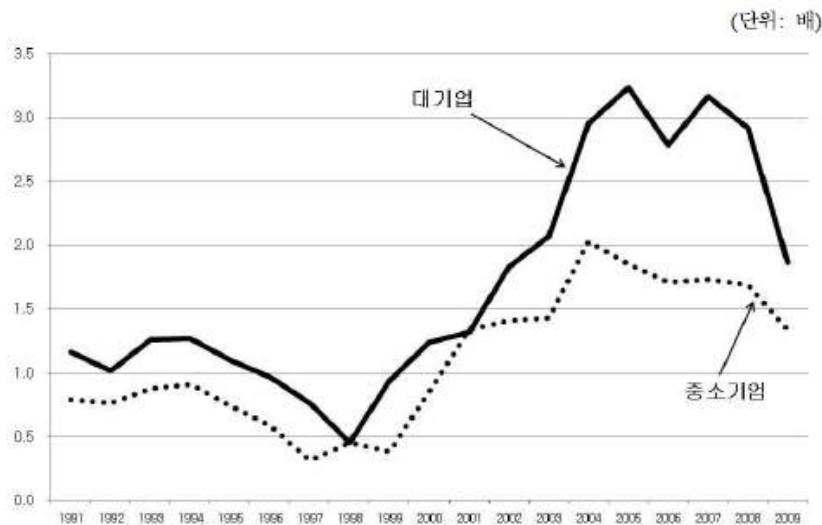
○ 대기업 vs. 중소기업:

- 전통서비스업: 2000년대 초반 이후 중소기업의 열위 확대 (수준은 대중소기업 모두 2000년 중반 이후 하락 추세)
- 근대서비스업: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열위 심화;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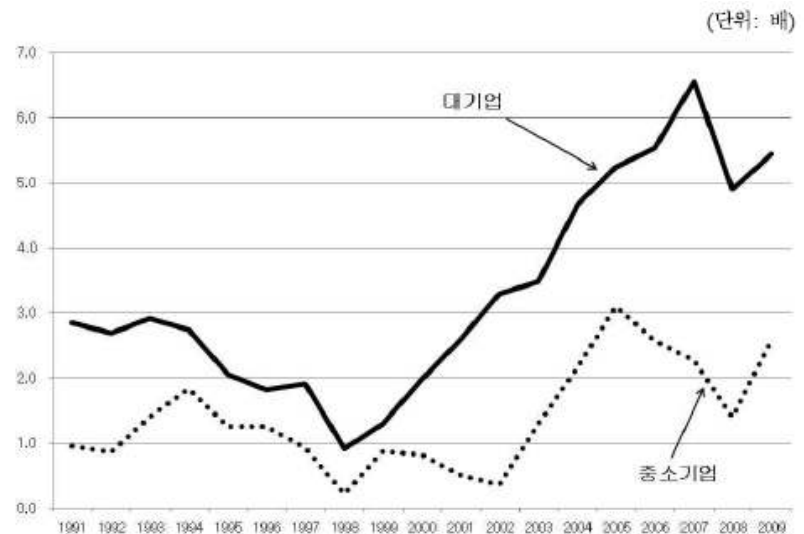
전통서비스업 vs. 근대서비스업



대기업 vs. 중소기업 : 전통서비스업



대기업 vs. 중소기업 : 근대서비스업



5. 혁신기반 격차의 확대: 인력과 연구개발투자

■ 종업원 수준 격차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임금·근로조건
격차 현저



대기업으로
고급인력 집중

* 박사급 연구원의 상위 20개사 집중도: 50% 수준

■ R&D 투자 및 혁신활동 격차

-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 민간 R&D 투자액 및 연구원 수에서 대기업의 비중 증가
-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선도·여타업체간 격차 확대
 - 특히 상위 5개사 중심으로 R&D 집중도 상승
 -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본격화 → 여타 중소기업체와 격차 확대
 - 2000년대 중반 들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증가율도 감소

IV

양극화의 국내 산업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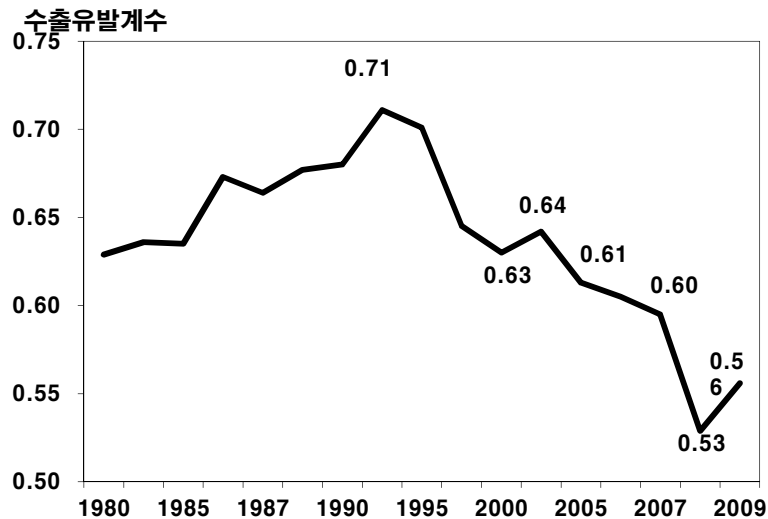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2. 향후 전망
3. 양극화 전망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1):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반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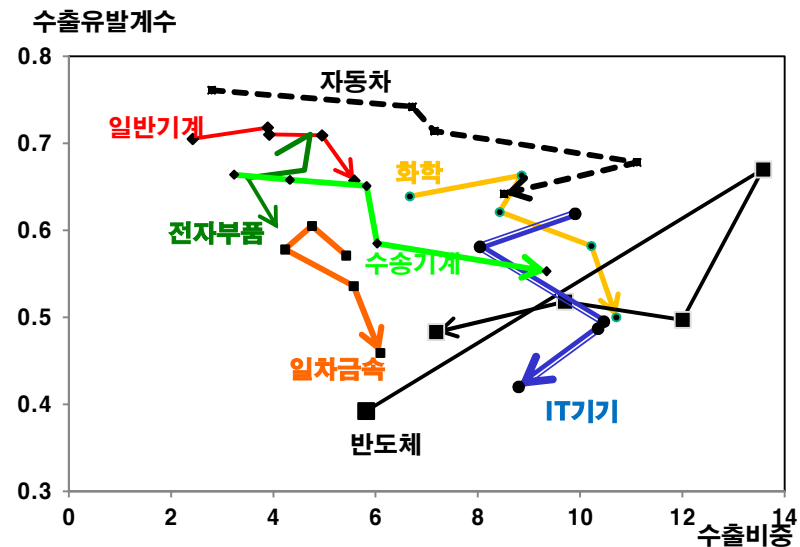
■ 부품·소재 등 중간자본재 취약 → 제조업내 양극화 및 수출·내수' 양극화

- 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 (18.8% ('90) ↗ 24.7% ('09))
 - 특히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가 높음(09년 기준 각각 43.7%, 44.8%)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0년대 중반 이후 급락 (반도체·IT기기 등 첨단업종 현저)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수출 1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수출비중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 독일·일본도 중간재 해외조달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핵심 중간재산업이 견고하여 내수 부문에 대한 충격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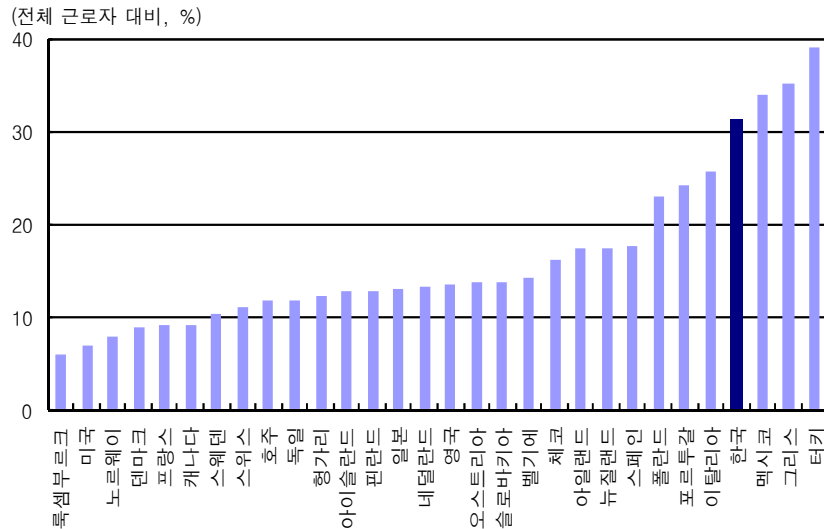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우리의 약 1.5배 이상 수준: 일본 0.89 ('00), 미국 0.91('90)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2): 과도한 자영업주 비중(1/2)

■ 자영업주의 과다 상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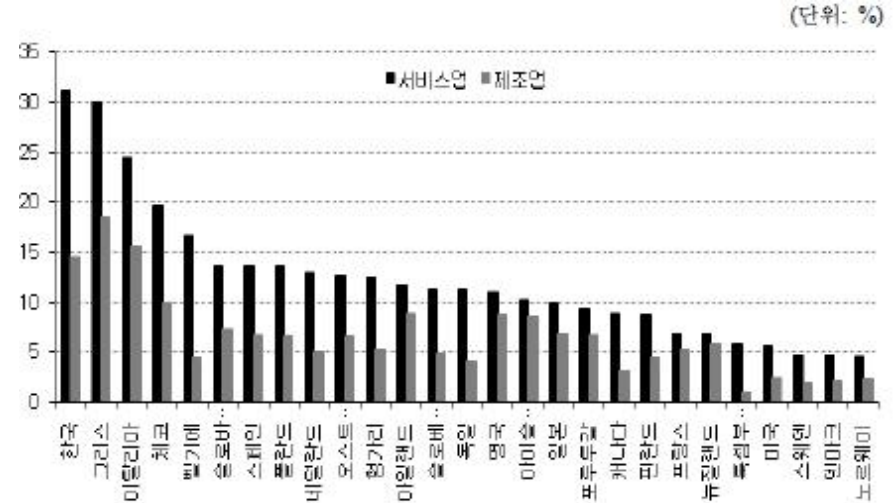
- 전체취업자 중 비중: 90년대 이후 27~28% 수준 유지 ('03년 600만명, 27.3%)
 - * 최근 감소세이지만 무보수 가사 노동을 포함할 경우, 2011년 현재 28.2% (OECD중 가장 높은 수준)
 - * 서비스업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제조업도 서비스업보다는 낮지만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2008년)



주: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자료: OECD(<http://stats.oecd.org>).

OECD 국가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2007년)



주: 일본과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
 자료: OECD STA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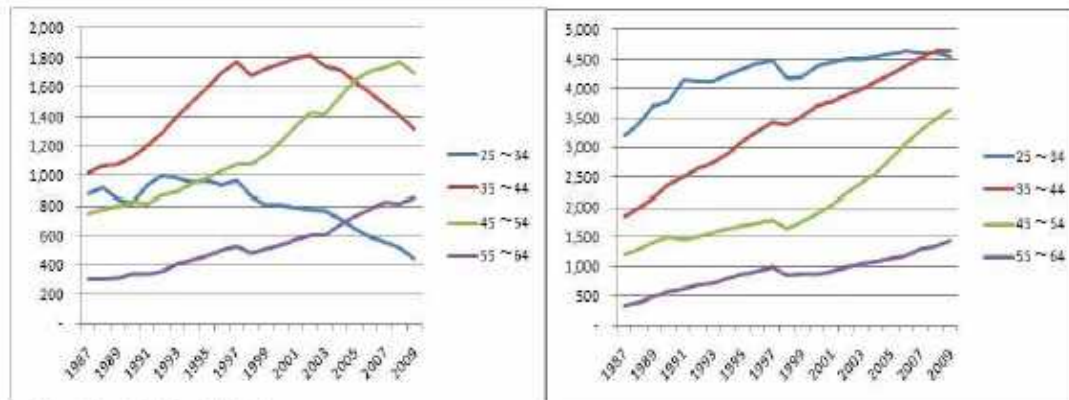
1.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2): 과다한 자영업주 비중(2/2)

- 취업구조: 도소매, 부동산임대, 농림어업, 개인사회서비스 등에 종사
 - 2004-08년 동안 도소매 비중 감소, 개인사회서비스 · 운수통신 증가
 - * 일본에 비해, 도소매 · 운수통신 비중이 높고, 건설 · 공공개인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음

■ 자영업주의 과다할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진행

- 고령화 진행: 45세 미만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감; 45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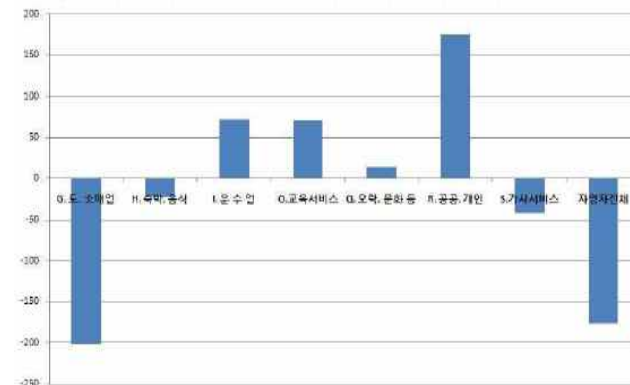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근로자 수 추이: 자영업자 vs. 임금근로자 (1987~2009년)



주: 비농가부문 대상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자료: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2009, KDI 최경수)

2004~08년간 산업별 자영자 수 변화



주: 비농가 25~64세 인구 대상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향후 전망

- 2004/5 양극화 T/F 보고서의 전망은 아직도 유효함:
- **업종-부문을 불문한 기업간 양극화**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 단계 → 지속/심화 예상

- **글로벌화, 중국부상 등 외부적 요인 지속/심화 예상**
 - 인도, 동남아, 남미국가 등의 고성장 기조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압력 증대
 - 노동집약적 내지 상대적인 저기술산업의 수익률 저하
-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경제주체간 혁신기반격차 (기술력, 인적자원 수준 등) 문제도 단기간에는 해소 곤란**
 - 혁신기반 격차의 상당부분은 교육·인력·기술(R&D) 등에 관한 기존 시장·제도의 문제에 기인 ⇒ 획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있다 해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움.

3. 양극화 전망

■ 소수 선도업체는 지속적으로 약진; 쏠산업에 걸쳐 취약업체 비중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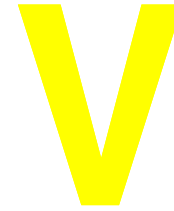
제조업

- ❖ 국내 선도대기업은 사업 portfolio 재구성기에 있으나 당분간 지속 약진
- ❖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도 지속 약진; 그러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음.
- ❖ 개도국 추격, 국내업체의 글로벌소싱 확대 → 취약업종 · 업체 확대
경공업부문은 물론 IT업종에서도 취약업체 비율 크게 증가

- 고용비중이 높으나 아직 비용우위에 의존하는 다수 산업 및 기업은 경쟁력 유지/향상 어려움
 - 원화가치 하락에 의존한 비용우위 요인을 유지하는데 한계
 - * 섬유류: 중국/후발산업국에 의한 국내 및 해외 시장 지속 잠식
 - * 정밀화학: 기술적 비교우위 요인 취약 => 중장기적으로 침체/쇠퇴 예상

서비스업

- ❖ 기업형 업체의 대두 본격화 → 소형업체의 지위 지속적 악화 예상
- 주요 업종의 수익성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악화
(생활서비스업은 물론 전문사업자서비스업도)



정책대응의 방향과 주요과제

1. 정책 방향
2. 정책 여건
3. 주요 과제

1. 정책방향: 동반성장

■ 현재 상태: 경제 전반의 저성장/경쟁력침체 기조 하의 양극화



■ 정태적인 시각에서의 양극화 감소가 아니라 동태적인 시각에서 양극화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

- 취약부문/업종 보호를 위한 단순한 사업보전성 정책으로서는 대응에 한계
 -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고리’ 를 고착화하여 빈곤계층을 양산할 위험성
- 개방, 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만으로도 대응에 한계
 - 구조조정 인프라(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과도기적으로 고용불안 계층을 증가, 분배구조를 악화 =>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침식할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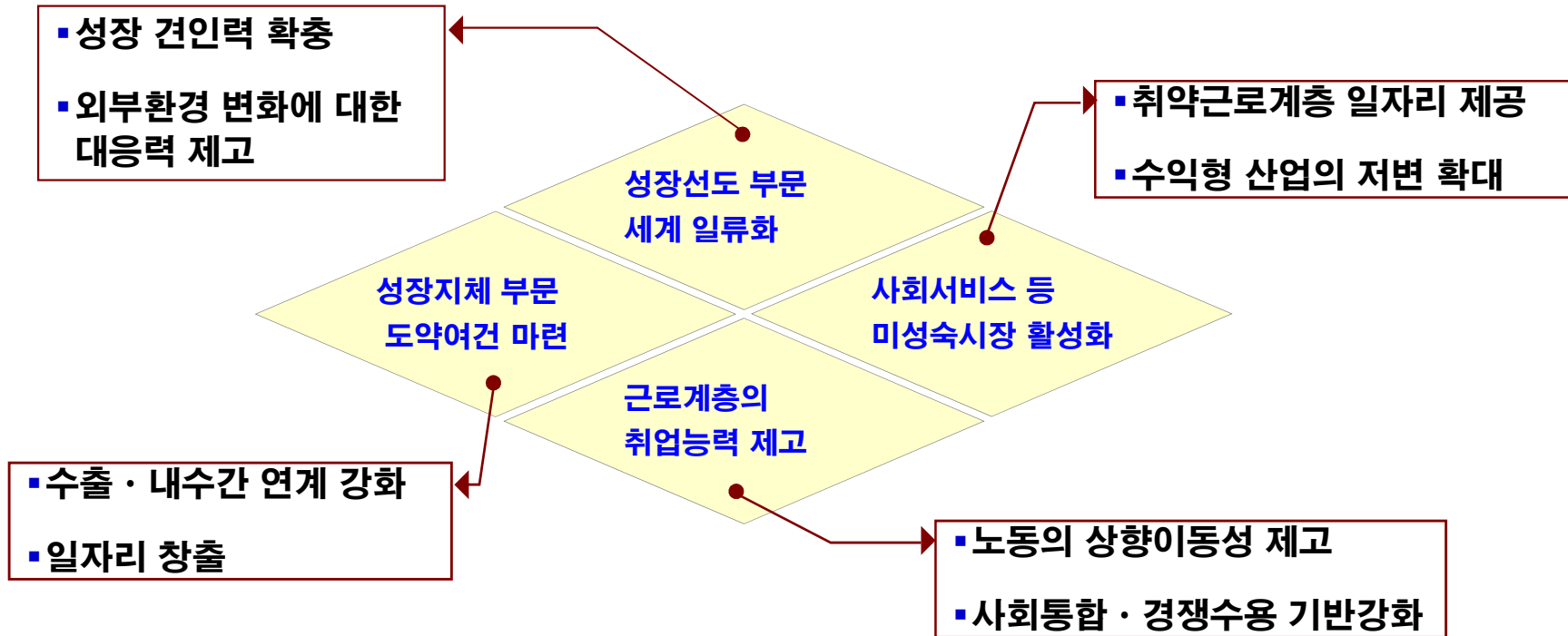


■ 선도부문과 낙후부문간의 동반성장 전략 필요

-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성과 극대화 => 성장 견인력 확충
-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경쟁의 취약계층의 자생적 대응능력 강화:
 - => 경쟁력 기반 및 성장동력원 확대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 *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시장경쟁 기능을 최대한 적용하되,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인 사람들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전략 (기업에 대한 지원 -> 사람에 대한 지원)

1. 정책방향

선도부문의 성장잠재력 최대한 구현 + 낙후부문의 자생능력 제고 : => **‘동반 성장’** (경쟁력의 동태적 상향평준화)



‘경쟁’ 과 ‘사회적 보호’ 에 관한 새로운 원칙, 정부 역할 정립 필요

- ✓ 경쟁 단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 기업 · 개인간 최대한의 경쟁 유도
- ✓ 경쟁전 단계: 기업 · 개인의 대응능력 ·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특히 개인)
- ✓ 경쟁후 단계: 낙오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경쟁부문으로의 재진입 유도

2. 정책 여건

■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유망 서비스업의 존재

-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서 고학력의 일자리 창출 여력 보유
 -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선진국보다 아직 낮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
특히 문화산업, 사업서비스(IT관련 및 전문사업자) 등 유망
-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기업화 지속; 2000년대 이후 선진국형 서비스업으로의 산업전환이 서서히 진행;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업(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의 육성으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출되는 중견인력 흡수 여력
 - 시장형성을 위하여 초기단계에 공공지출이 필요
 -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 확충이 중요

■ 인적자원 잠재력

- 근로계층의 교육수준·학습동기가 높아 자기주도적 학습 촉발/확산 가능
 - 자영업자·임시일용직 등 취약근로 계층의 교육수준도 비교적 양호
 - 직업훈련 지원정책이 개선될 경우 상당한 투자효과 기대 가능
-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중요
 - 정책 대상 계층이 방대하며,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고령자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

3. 주요과제 (1): 서비스업 구조 개선 (1/4)

▶ 서비스업의 장기적 · 종합적 발전 비전이 미정립된 상태

- 개별부처 차원에서의 기존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지원방안 위주
- 정책조정 어려움으로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예: 방송-통신융합)

▶ 이해집단간 갈등 조정의 지연으로 서비스업 구조개선이 지연

- 규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화에 이익집단들이 저항

▶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도 미형성

-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분석 미비로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금융공급에 애로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도 제조업 중심으로 유지

[참고] 최근의 주요 서비스산업 정책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관광, 교육 및 지식기반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 08.4)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고용, 방송·통신·콘텐츠 분야 등 규제 합리화 (' 08.9)
-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업 R&D 활성화 (' 09.1)
- 제조업과 차별 해소 및 교육, 콘텐츠 등 9개 유망서비스업종 육성 (' 09.5)
-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외국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 (' 09.9)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서비스 분야 육성방안

-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방안 (' 10.4)
-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 10.5)
-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 10.7)
-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 10.8)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10.9)

❖ 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분야 활성화 방안(2011년)

-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추진방향(4월)
-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6월)
-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7월)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과제(8월)
-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11월)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12월)

3. 주요과제 (1): 서비스업 구조 개선 (2/4)

▶ 서비스업의 혁신성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 업종간 융합, 신사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거** 및 신속한 정책결정
 - 최근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크게 개선
 - 그러나 경쟁제한적 규제 수준을 반영하는 **서비스업의 마크업은 OECD국 중 2위**
 - * 국내외 시장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의 마크업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
-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능력 배양을 위한 정부지원체계의 정비
- **사업자 단체의 조직화, 전문화로** 지원정책의 실효성, 책무성 확보

▶ 서비스업의 시장확대 및 고용흡수력 증대를 위한 정책조합 추진

- 내수소비의 성장 기여도 제고를 위한 균형성장전략의 추구
- **교육·의료 등 지식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로 고급서비스의 국내소비 유도
 - 경제자유구역, 규제특구, 기업/혁신도시 등 특수 지역권내부터 확산
-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의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
 - **전통문화 자산의 사업화**(컨텐츠 개발 지원 등 공급측 정책과 내수진작 정책 병행)

3. 주요과제 (1): 서비스업 구조 개선 (3/4)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산업군별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발전 도모

-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서비스 업종**의 선정과 집중적 지원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연장선상에서 **기업지원서비스의 성장 촉진**을 유도
 - 중소기업의 제품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위한 관련서비스의 공급확대 지원
 -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 경영지원 바우처) 강화로 시장확대 유도
 - * 저부가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고부가 서비스로의 자원 재배치를 촉진하는 수단
- **IT·BT 등 신성장동력 업종**에서도 제조-서비스업 연계된 발전방안 마련
 - Bio 연구개발과 의료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발전방안 마련
 - 시장이 불확실한 Bio기술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시장과 결합하여 성장기반 제공
 - 의료서비스는 Bio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혁신산업으로 탈바꿈을 유도

3. 주요과제 (1): 서비스업 구조 개선(4/4)

▶ 혁신의 확산과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

- 영세 전통서비스업종 인력(청장년)을 고성장·고생산성 업종으로 흡수
 - 최근 중대형업체 및 고생산성 업종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직한 추세
- 구조조정에 처한 중소기업체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훈련 강화
 - 민·관협력 형태의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제도 정착
 - *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훈련사업의 참여율 및 실효성 제고
 - * 비정규직 근로자: 새로운 시범사업 도입, e-learning 기회 확대
 - * 자영업자: 능력개발사업 도입 및 전직/전업지원 강화
- 공공훈련의 질 제고 및 지방정부 및 민간업체/단체의 참여 제고

3. 주요과제 (2): 중소기업의 고도화(1/2)

➤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배양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채용보조금 확대**
- 중소기업에 기술지원기관 선택을 위한 쿠폰 제공
- 대학·연구기관 평가에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실적도 반영 제고

➤ 혁신형 중소기업에 적합한 자금지원 방식의 강구

- **융자보다 투자중심의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중소기업 보유 기술평가 활성화: 평가기관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 장기적으로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안정적 투자자금 공급 유도

➤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집중 지원

- 수요대기업·중소공급업체·연구기관·정부 공동으로 유망품목 발굴과 집중적 지원
-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펀드 조성 및 세제 지원
- **외국계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 강화**: 투자보증 및 인력훈련에 기업수요 반영
 - * 기 진출 외국계 선도기업의 협력업체 집중 유치

[참고] 최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생산기반 고도화 정책**
 -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02)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03)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04)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정책('04. 7)**
-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 12)**
-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05. 5)**
- ❖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편('05. 6)**
-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05)**

- ❖ **창업절차 간소화('08. 4)**
- ❖ **중소기업 제도 개혁방안('08. 8)**
- ❖ **중소기업 유동성(Fast Track) 지원('08. 10)**
- ❖ **중소기업 성공전략('08. 11)**
- ❖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09. 8)**
-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09. 10)**
-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10. 9)**
 - 공정거래 질서확립
 -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
 - 지속적인 추진 · 점검 체계구축

3. 주요과제 (2): 중소기업의 고도화(2/2)

➤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공동기술개발, 협력투자, 기술지도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R&D비용의 납품단가 반영, 공정혁신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등 자율적 협력 독려
-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불공정 거래업체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 및 명단 공개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

- 국제조달시장 및 해외유통시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진출 준비 기업에 대한 현지정보의 제공 강화

➤ 한계기업 퇴출 및 M&A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축소, 창업 및 기술혁신에 대한 보증 확대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매매시장 활성화: 자산관리공사의 투자펀드 활용

➤ 경공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기업화 지원으로 고용방출 완화

- 나노·디지털 기술, 디자인 및 한류문화 활용으로 아시아 고급시장 점유 확대

➤ 중소기업 정책추진 체계 개선: 중기청 및 산하 조직의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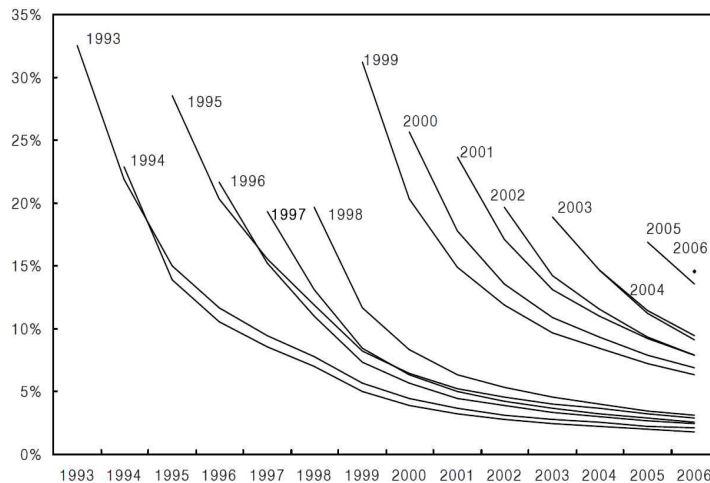
- 지역혁신체제(RIS) 정착 노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혁신주체의 역할 제고

[참고] 국내 중견기업의 부재와 기업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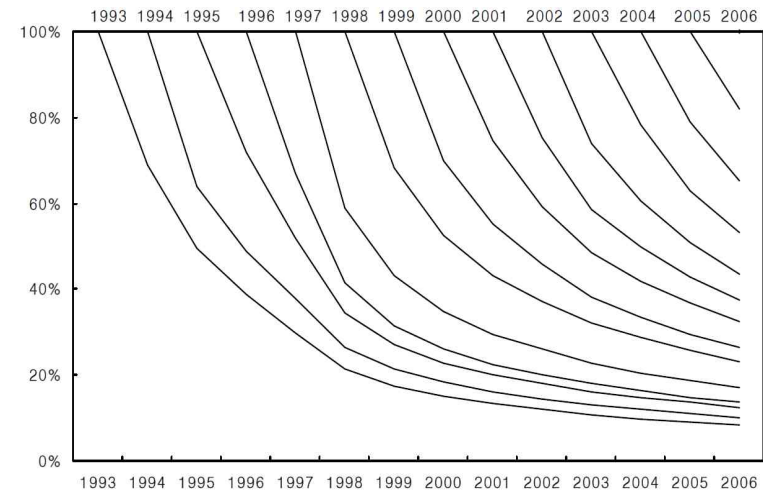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장벽이 존재

- 신규기업 중 중견이상 규모로 계속 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뭄: 생존을 자체 저조; 생존한다 하더라도 일정규모까지 성장하다 이후 정체되는 경우가 대다수
 - 상위 1%업체들(2003년 기준)의 규모는 경미한 증가세, 그러나 아직도 평균 규모는 작은 편
 - 1993년 기준 창업기업의 2006년 생존률은 10% 미만

창업연도별 업체군의 업체수 비중



창업연도별 업체군의 생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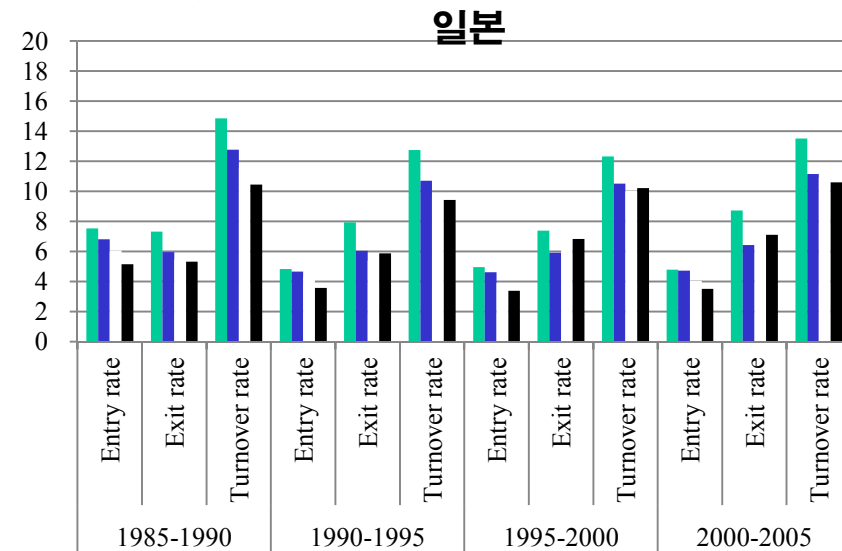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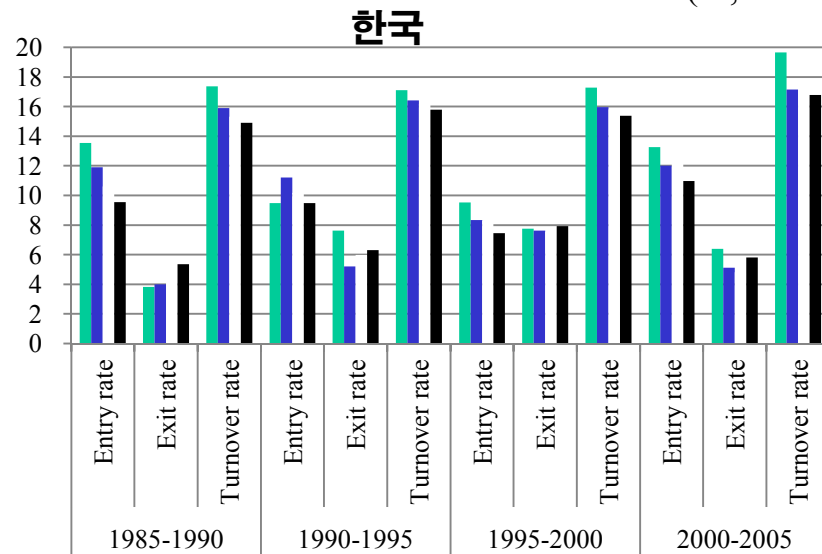


Source: Sanghoon Ahn et Al.(2011), Productivity Dynamics: A Comparis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and Japan

[참고] 기업 생태동학 (firm dynamics)

-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진입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
- 기업의 생존율도 매우 낮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소수
- 진입장벽이 아니라 ‘생존장벽’ 이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도 단순히 진입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입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환경,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 제한적

진입, 퇴장과 전환율 (Entry, Exit Turnover Rates)
(%, annualized, 1985-2005)



- High Technology Manufactures
-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es
- Medium-Low Technology Manufactures
- Low Technology Manufactures

- High Technology Manufactures
- Medium-High Technology Manufactures
- Medium-Low Technology Manufactures
- Low Technology Manufactures

3. 주요과제 (3): 중소기업 R&D 지원체제 개선(2/2)

향후 정책과제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 활성화가 관건

● 기술창업 기반의 정비

- 대학·연구기관의 R&D관련 “상업적 서비스” 허용, 연구원의 겸직 및 기업지분 소유 허용 등
- 연구원의 기술자문·기술이전·실용화 등에 대한 평가·보상제도 정비 및 PBS제도 보완
 - * 프랑스는 1999년 “혁신법” 제정을 통하여 공공R&D의 기술창업 촉진

● 중소·벤처 기업의 협동연구 지원

- 중소·벤처기업 단체의 과제 기획 → 협동연구기관 선정 및 지원
 - * 독일의 산업협동연구협회(AiF): 109개 부문별 산업단위의 공동연구 조직화

● 정책전달체계 및 정책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정책 효과성 및 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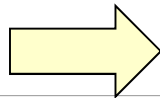
- 지역 중소기업청 등 **중개기관의 성과관리 강화**
- 기술과제 기획에서 산업화·실용화 계획 구체화 및 **R&D관리 DB통합** 등 정책인프라 정비

3. 주요과제 (4): 부품소재 FDI 전략혁신

◆ 외환위기 이후 많은 지속적인 있었지만 아직 해외자원의 전략적 활용 마인드 부족

- 특히 FDI의 전략적 유치 미흡(총량 위주),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교육·의료 등) 조성 미흡

▶ FDI 유치 노력
획기적 강화



▶ 중견기업 부족의 문제점 보완 (특히 부품소재)
▶ 국내 기업생태계의 질 개선의 추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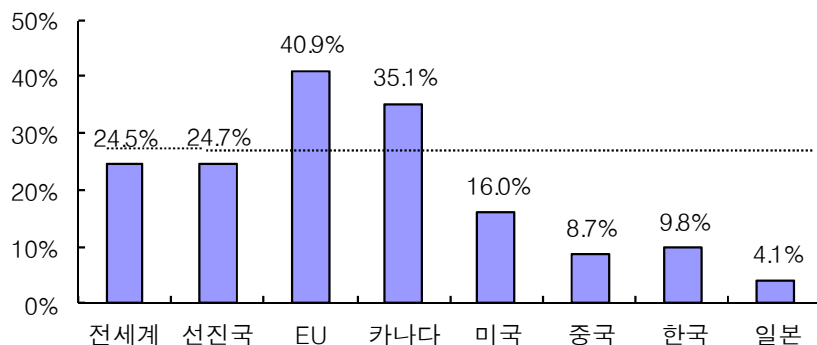
- ✓ 투자유치 잠재력은 매우 크나, 투자유치 전략의 혁신 필수적
 - 독일·일본업체가 주된 유치대상 (상호 경쟁관계, 동북아 거점 필요)
 - 중국에 대해 입지경쟁력 보유 (경험집약적 산업)
- ✓ 낮은 인지도, 중소 개별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투자위험 등이 큰 장애 (중국의 빠른 추격 예상; 향후 FDI 유치에 있어서 중국과의 최대 경합분야)
 - ✓ 제도정비 및 획기적인 투자환경·유인 제공
 - M&A형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
 - 신용보증사업의 부분적 전환 등 투자위험 경감 장치 마련
 - 시장개방 등을 통한 교육/의료 등 시장환경 개선
 - ✓ 정부·국내 외국업체·국내업체 공조의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 거시투자환경 및 산업 세부사항을 포괄한 정치한 IR 활동 전개
 -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현지 협력(전후방연관)업체 유치에 초점

[참고] 우리나라의 FDI 및 해외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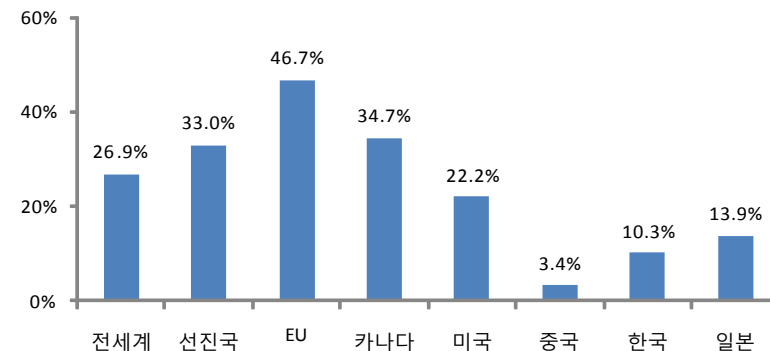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실적은 경제 및 교역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

-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2004년 이후 감소세
 - * 1980-2005년 기간 중 전세계 수출액은 5.3배 증가한 데 비해 직접투자 규모는 17.1배 증가
-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아시아, 중동 대상)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는 제한적

FDI (유입) 총액 (GDP 대비 %)



해외직접투자 총액(GDP 대비 %)



자료: UNCTAD(2009), 2008년 실적 기준.

[첨부표] 우리나라의 산업 및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2011)

(단위: 천명, %)

	취업자 (고용비중)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율)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비율)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농림어업	1,542 (6.4)	1,385 (89.8)	45	905	435	157 (85.2)
광공업	4,108 (16.9)	592 (14.4)	234	220	138	3,516 (22.9)
전기가스수도	76 (0.3)	2 (2.7)	1	1	0	74 (12.9)
건설업	1,751 (7.2)	385 (22.0)	152	209	23	1,366 (61.4)
서비스업	16,767 (69.2)	4,483 (26.7)	1,072	2,753	658	12,284 (40.4)
▪도매 및 소매업	3,629(15.0)	1,531 (42.2)	368	882	281	2,097 (53.1)
▪숙박 및 음식업	1,859(7.7)	765 (41.1)	286	268	211	1,095 (82.3)
▪통신운수금융	2,299(9.5)	661 (28.8)	38	607	17	1,638 (29.5)
▪부동산 임대 서비스	476 (2.0)	171 (35.6)	41	112	18	308 (51.3)
▪사업서비스	1,136 (4.7)	47 (4.1)	22	20	5	1,089(37.6)
▪교육서비스업	1,671 (6.9)	322 (19.2)	63	239	21	1,350 (34.8)
▪공공사회개인서비스	2,210 (9.1)	400 (18.1)	63	292	44	1,811(39.3)
전 체	24,244 (100.0)	6,847 (28.2)	1,505	4,088	1,254	17,397 (3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감 사 합 니 다 !